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348-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Condition of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nd Resident Satisfaction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기관명: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연구책임자:	심	재	현	부	연	구	위	원		
공동연구원:	노	승	철	위	촉	전	문	연	구	원
	권	인	혜	전	문	연	구	원		
	한	태	녕	연	구	조	원			

요 약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를 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했고, 2013년에는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2014년에는 기존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특별히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수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현황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① 농어촌 현황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③ 농어촌 영향평가(장애인복지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 ④ 정책 프로그램 단위의 심층평가(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등 4개 세부과제로 기획했다. 이 보고서는 전문지원기관의 총괄 보고서로서, 농어촌의 현황과 변화 실태, 주민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2012년에 개발하여 매년 추진해 온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더 발전시켜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도출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영역에 맞추어 생활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교육, 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 등 7개 부문 24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 지수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시·군 단위와 삶의 질 향상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 마을패널 조사를 올해도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전화조사(일부 응답이 저조한 마을에 대해 방문면담조사 병행)를 실시했다.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20개 행정리를 마을패널로 구성하고, 이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행복감, 정주환경을 고려한 만족도 등)와 정주지 발전 전망에 대한 인식, 정책 부문별 만족도, 이주 의향 등을 질문했다.

셋째, 2014년에는 도시민·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처음 도입했다. 도시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조사의 틀을 개발하였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밖에, 중앙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인구, 생활환경, 경제활동,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환경 등과 관련한 농어촌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 분석 결과는 2013년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올해 갱신이 가능한 통계자료를 최신 자료로 갱신·분석하여 부록으로 수록했다.

주요 연구 결과

■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도출하여 시·군 단위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단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부문별 지수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지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삶의 질

항상 정책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환경, 보건·복지 등 삶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발굴은 아직도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여 년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세부 부문 중 생활환경, 보건·복지 부문의 격차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다른 부문에 비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차별적인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 부문, 의료 서비스 부문, 보건·복지 부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발굴이 요구된다.

셋째, 군 지역 안에서도 지역경제 및 보건·복지 분야의 성장 격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및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하위 군과 상위 군 간의 격차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하고 있는 군과 그렇지 못한 군의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고 저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측정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성과는 크게 시·군의 발전 정도 측정 및 시·군 간 지역발전의 비교이다. 하지만 지수로 측정된 정책적 제안이 실제 정책 발굴이나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수는 단지 측정 지표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수 체계를 유지한다면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맞추어 기준점(baseline) 설정을 하고 기준시점 이후 지역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지표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시계열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여야 하며, 성과지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을패널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20개 농어촌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전반적인 만족도나 거주 시·군의 발전 가능성

에 비해, 거주 마을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마을의 발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49.6%(무응답한 경우를 포함할 경우 49.2%), ‘보통’ 응답은 40.9%(무응답한 경우를 포함할 경우 40.5%)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살고 있는 시·군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지의 질문에는 42.0%가 긍정적으로, 36.2%가 보통으로 답하여(무응답한 경우 포함)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하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고 있는 마을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7.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40.2%는 ‘보통’ 의견을 보였지만, 24.0%는 부정적(살고 있는 마을이 발전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0~3점)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4분의 1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둘째, 정책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지역경제 부문에 보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정책 부문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1순위만 집계한 결과와 1~3순위를 집계한 결과 모두 보건·복지(28.0%)와 지역경제(15.2%) 부문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평균 점수)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결과에서 보건·복지는 만족 수준이 비교적 높았지만, 지역경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서도, 지역경제 부문의 지수는 4.3으로 전 부문 평균(5.26)보다도 상당히 낮고, 각 부문들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도 20.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만큼,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소득·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 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강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서는 지역경제 부문 외에 문화·여가(3.1)와 교육(4.9) 부문이 전 부문의 평균값(5.26)보

다 낮게 나타났다. 이 두 부문은 정책부문별 중요도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당장의 시급한 필요는 아니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는 745개 복수응답 중 세 번째로 높은 7.1%가 문화·여가 및 체육(운동), 휴식 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이주 의향을 가진 응답자 90명을 대상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11.1%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교육은 현 거주지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넷째, 정주체계상 마을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 환경의 불균형을 완화·개선하기 위한 유연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여가, 주거 및 생활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등의 부문에서, 인구(가구)규모 및 정주체계상의 성격, 시·군청 소재지 접근성 등과 관련한 마을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대규모 중심지 마을일수록, 시·군청 소재지에서 가까운(접근성이 높은) 마을일수록 만족 정도가 높았다. 이들 부문은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중요도에서 상위를 차지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개방형 질문) 부문들인 만큼, 정주체계상 마을유형에 따라 각종 서비스 이용 환경의 불균형이 생기는 부분을 완화하고, 정주체계상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불리한 접근성에 기인한 불편(불만족)을 완화·개선하기 위한 유연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비교

도시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주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 마을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과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촌은 두 항목 모두 도시 주민에 비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에 비해 마을 발전의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마을의 발

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시·군 발전이 마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지역 내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마을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부문별로 보면 지역사회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으며, 그 중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이다. 특히 문화·여가 부문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과 시설 이용 세부 항목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데, 두 세부 지표에 대한 농촌 주민의 만족도는 도시 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여가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합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정책 8대 부문(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전’ 부문을 포함)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농촌 주민들은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지역경제, 안전, 주거 및 생활환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에서 지역경제 부문보다도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어,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는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체감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소득사업 기반의 복지 모델, 공공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합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전원생활을 위한 이주 의향이 높으며, 이주 의향이 실제 이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농 간 정주환경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민 응답자의 42.1%가 농촌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대부분 전원생활을 위해(67.3%)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 이

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청·장년층에서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은퇴자들의 농촌 이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으로 이주 의향이 실제 이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농 간 정주환경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 결과는 도시와 농촌 간 정주 격차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내용과 방법 5

제2장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1. 지수 개발의 목적과 절차 9
- 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구성 체계 12
- 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생성 18
- 4. 농어촌 실태 분석 35
- 5. 소결 및 시사점 41

제3장 마을패널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 1. 조사의 목적 43
- 2. 조사 대상 마을 44
- 3. 조사 내용과 방법 48
- 4. 분석 결과 51
- 5. 소결 및 시사점 92

제4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비교

- 1. 조사의 목적 95
- 2. 조사 대상 96
-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97
- 4. 주요 분석 결과 101
- 5. 소결 및 시사점 111

부록 1: 통계로 살펴본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115
부록 2: 지역 구분 및 시·군명	134
부록 3: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조사표	135
부록 4: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	140
부록 5: 2013년 및 2014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	145
참고 문헌	147

표 차례

제1장

표 1-1.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업무 요약	5
---	---

제2장

표 2-1.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및 갱신 여부	15
표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17
표 2-3. 주민 의견만 반영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	17
표 2-4. 보건·복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1
표 2-5. 교육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3
표 2-6. 생활환경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4
표 2-7. 지역경제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5
표 2-8. 문화·여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7
표 2-9. 환경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29
표 2-10. 지역사회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31
표 2-11. 부문 지수 간 상관관계	33
표 2-1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변화	39

제3장

표 3-1. 조사 마을의 개요	47
표 3-2. 마을별 조사 응답 현황	50
표 3-3. 응답자 연령대	51
표 3-4. 응답자 직업	51
표 3-5. 응답자 가족구성	52
표 3-6. 응답자 마을 거주기간	52

표 3-7. 응답자 귀농·귀촌 여부	52
표 3-8. 응답자 성별 비교(2013~2014)	53
표 3-9. 응답자 연령대 비교(2013~2014)	53
표 3-10. 응답자 소득수준 비교(2013~2014)	54
표 3-11. 응답자 가족구성 비교(2013~2014)	54
표 3-12. 만족도: 행복감, 정주여건 만족도(2012~2014년)	55
표 3-13. 만족도: 정주지 발전에 대한 인식(2012~2014년)	57
표 3-14.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59
표 3-15.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	60
표 3-16.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63
표 3-17. 마을 유형(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부문별 삶의 질 만족도 차이 ...	68
표 3-18. 연도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2012~2014년)	71
표 3-19.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중·하 지역 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74
표 3-20. 마을의 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75
표 3-21. 마을 인구 규모 및 정주체계상 중심성에 따른 마을 유형 구분	76
표 3-22. 마을의 인구 규모 및 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78
표 3-23. 시·군청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86
표 3-24.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및 이주하려는 지역	88
표 3-25. 이주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89
표 3-26.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91

제4장

표 4-1.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2013년 말 기준)	96
표 4-2. 조사 방법 및 개요	98
표 4-3.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만족도 조사 항목	99
표 4-4. 농촌·도시 삶의 질 실태와 정주만족도 조사 응답자	100
표 4-5. 농촌과 도시 간 부문별 만족도 평균점수	102
표 4-6.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 및 이주하려는 이유	105

표 4-7. 연령대별 농촌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106
표 4-8.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중요도별 도시·농촌 간 만족도 비교 ...	107
표 4-9. 도시·농촌 간 보건·복지 부문 지표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비교 ...	108
표 4-10.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부문 지표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차이 ...	108
표 4-11. 도시 주민의 삶의 질 부문별 만족도 및 삶의 질 지역발전 지수 비교	109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8
----------------------	---

제2장

그림 2-1. 지수 개발 및 분석 과정	11
그림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개념 영역	13
그림 2-3. 보건·복지 부문 4분위 지도	21
그림 2-4. 교육 부문 4분위 지도	22
그림 2-5. 생활환경 부문 4분위 지도	24
그림 2-6. 지역경제 부문 4분위 지도	26
그림 2-7. 문화·여가 부문 4분위 지도	28
그림 2-8. 환경 부문 4분위 지도	29
그림 2-9. 지역사회 부문 4분위 지도	31
그림 2-10.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산출 과정	32
그림 2-11. 2014년 삶의 질 지역발전 지수 분포	36
그림 2-12. 시기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38
그림 2-13. 2012~2014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부문별 지수	40

제3장

그림 3-1. 조사 대상 마을	46
그림 3-2. 행복감 응답 결과(2012~2014년)	56
그림 3-3. 정주여건 만족도 응답 결과(2012~2014년)	56
그림 3-4. 만족도: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2012~2014년)	58

그림 3-5. 만족도: 시·군의 발전 가능성 인식(2012~2014년) 58

그림 3-6.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순위 부여) 61

그림 3-7.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환산점수) 61

그림 3-8. 중요도 대비 만족도 매트릭스 64

그림 3-9. 부문별 중요도 대비 만족도: 전체 마을 65

그림 3-10. 부문별 중요도 대비 만족도: 중심지마을 및 배후마을 67

그림 3-11. 마을 유형(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8대 부문별 중요도 인식 ... 67

그림 3-12. 2014년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70

그림 3-13.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변화(2012~2014년) 72

그림 3-14.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입지 80

그림 3-15.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입지 82

그림 3-16.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입지 84

그림 3-17.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및 이주희망지역 88

그림 3-18. 이주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90

제4장

그림 4-1.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비교 ... 101

그림 4-2. 농촌과 도시 중요도 환산점수 비교 102

그림 4-3. 농촌·도시 주민의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 103

그림 4-4. 농촌 및 도시 지역 포트폴리오 104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0~2014, 5년)’에 따라 2014년에는 1개 위원회, 11개 부처, 3개 청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 시·도가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3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보건·복지 증진 부문(37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부문(17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부문(17개),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18개), 문화·여가 여건 개선 부문(12개),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부문(21개), 지역역량 강화 부문(10개)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4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7조 7,099억 원을 투·융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국비는 4조 2,766억 원, 지방비 2조 6,722억 원, 민자 등 기타 7,6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 특별법」)¹ 제46조에 의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질향상특별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추진 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 외에도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변화의 모니터링, 농어촌 지역의 진단과 지역 간 비교,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1 2004년 법률 제정 당시 법률 명칭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다만, 법률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범위나 정책의 내용적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1항 및 제2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²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2012년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연구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2013년에는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였다. 2014년에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 수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 2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4년에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수행하였다.
 - 2014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자문단’을 분과별로 구성하여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였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의 현황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다음의 4가지 세부과제를 4개 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다(표 1-1).
- (1) [총괄팀] 농어촌 실태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 (2) [서비스기준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3) [영향평가팀] 농어촌 영향평가: 장애인복지 정책, 폐기물관리 정책, 2011~2013년 농어촌 영향평가 정책들에 대한 추수 평가
 - (4) [심층평가팀] 정책 프로그램 단위 심층평가: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 특히 총괄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어촌 현황과 변화 실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4년도에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과 도시 주민이 생각하는 부문별 삶의 질 만족도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통계자료를 통한 농어촌 현황과 변화 실태 파악
 -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개발과 분석

- 마을패널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조사·분석
- 도시·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조사
- 기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업무 등

표 1-1.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업무 요약

구 분	주요 업무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통계로 파악하는 삶의 질 실태와 변화 -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160개 시·군 단위) - 농어촌 마을패널 조사 및 분석(20개 마을 대상) - 도시·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조사 •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제반 여건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서비스기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 관련 정책 개선 방안
영향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정책에 전문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 - 2011~2013년 농어촌 영향평가 정책들에 대한 추수평가
심층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프로그램 단위 심층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2. 연구 내용과 방법

□ 통계자료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 실태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기초가 되는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농어

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구축된 통계자료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별로 현황, 변화,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³

□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2012년에 개발한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더욱 발전시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시·군 지역 단위로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계획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통해 정책 부문 단위로 비교 분석하였다.
 - 도농복합시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일 반시도 함께 분석했다.

□ 농어촌 마을패널 조사·분석

- 전문지원기관은 보다 현장성 있게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조사·분석 하여 관련 정책에 실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어촌 마을패널 을 조사·분석해오고 있다.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석을 위해 20개 행정리를 마을패널로 구성했다.
 - * 마을패널 조사는 2012년 10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것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3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별권 보고서로 2013년에는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발간하였으나, 올해는 갱신이 가능한 통계자료 구득에 한계가 있어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지는 않고 <부록 1>에 “통계로 살펴본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다.

- 조사 내용은 ① 가구 특성(가족구성, 소득, 거주환경 등), ② 마을 환경(기반 시설, 생활서비스 이용, 복지시설, 여가시설 등), ③ 지역 공동체(네트워크, 지역사회의 지원 기능 등), ④ 삶의 질(만족도 및 중요도) 등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 도시민·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

-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에 대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층화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 2014년에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비교 분석을 위한 조사의 틀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조사 실시

□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운영을 통해 위원회 업무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였다.

-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집단 등과 인터넷 상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

□ 언론 기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홍보

-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지역 경쟁력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⁴를 도출하고 우수한 지역 사례를 발굴했다. 그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공동으로 ‘2014 지역경쟁력지수 평가’로 정리하여, 2014년 12월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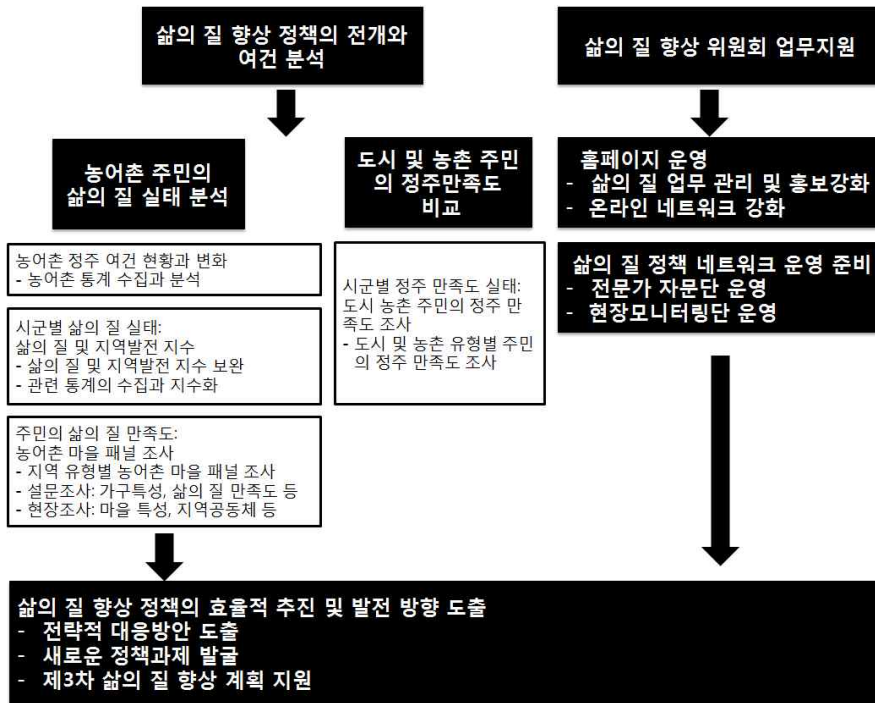
4 RDI는 농촌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표로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개 부문의 20개 지표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재현 등(2014)을 참고할 수 있다.

기사를 통해 발표하였다.⁵

- 개별 시·군의 발전 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특정 부문별로도 지역여건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2014년 RDI와 2012년 RDI를 비교·분석하여 각 시·군의 지역 여건 변화를 분석했다.

* 관련 내용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로 “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를 발간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2014 지역경쟁력지수 평가’ 결과를 12월 세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 기사로 발표했다. “2014 ‘우리 시·군 경쟁력은’”이라는 제목 아래, 26일에 “지역경쟁력 어디서 나오나”, 29일에 “지역경제와 복지의 균형”, 30일에 “농어촌 ‘삶의 질’ 높아진다”라는 소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제2장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1. 지수 개발의 목적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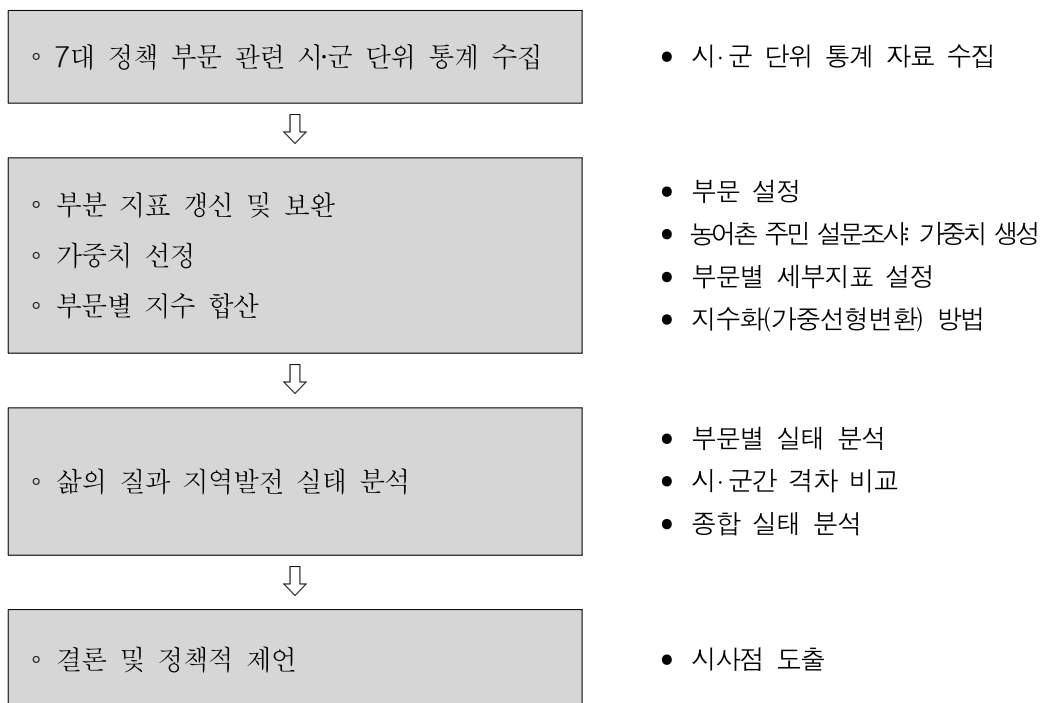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가 개발되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보안을 통해 지수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 농어촌 정책의 핵심적 목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시·군 단위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지난 3여 년간 시기별 지수를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과 정책 투입에 따른 성과를 지역적 측면에서 종합·고찰할 필요도 있다.
 - 시기별 진단 지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안정화를 이루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

본계획과의 비교를 위한 지표 체계의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제2장에서는 2012년부터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보완·수정·갱신하는 것과 이를 활용하여 2014년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2012년과 2013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 실태를 분석한다.
 - 부문·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정책 영역을 강화해야 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지 등을 점검하는 데 활용한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세부지표의 자료를 갱신 및 수정하고, 부문별 중요도 가중치 변화를 측정한다.
 - 시계열 자료를 누적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4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에는 상기의 목적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목적이 추가되었다.
 - 농어촌지역 주민 관점의 중요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의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로 조사되어 산출해 왔던 가중치를 주민 주도의 가중치로 바꾸어 보다 더 현실적인 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 2014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개발을 통해 2012년, 2013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시·군별 삶의 질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지수 개발의 주요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용한 자료의 한계 내에서 부문별 지표들을 선정한다.
 - 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표의 적합성 검토 및 각 부문별 가중치를 생성한다.
 - 시·군별 통계자료 수집 후 세부지표별 표준화와 가중치 적용을 통해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생성한다.
 - 부문별 실태, 종합 실태를 분석하고 2012년, 2013년도 지수와 비교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변화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림 2-1. 지수 개발 및 분석 과정



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구성 체계

2.1.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구성 및 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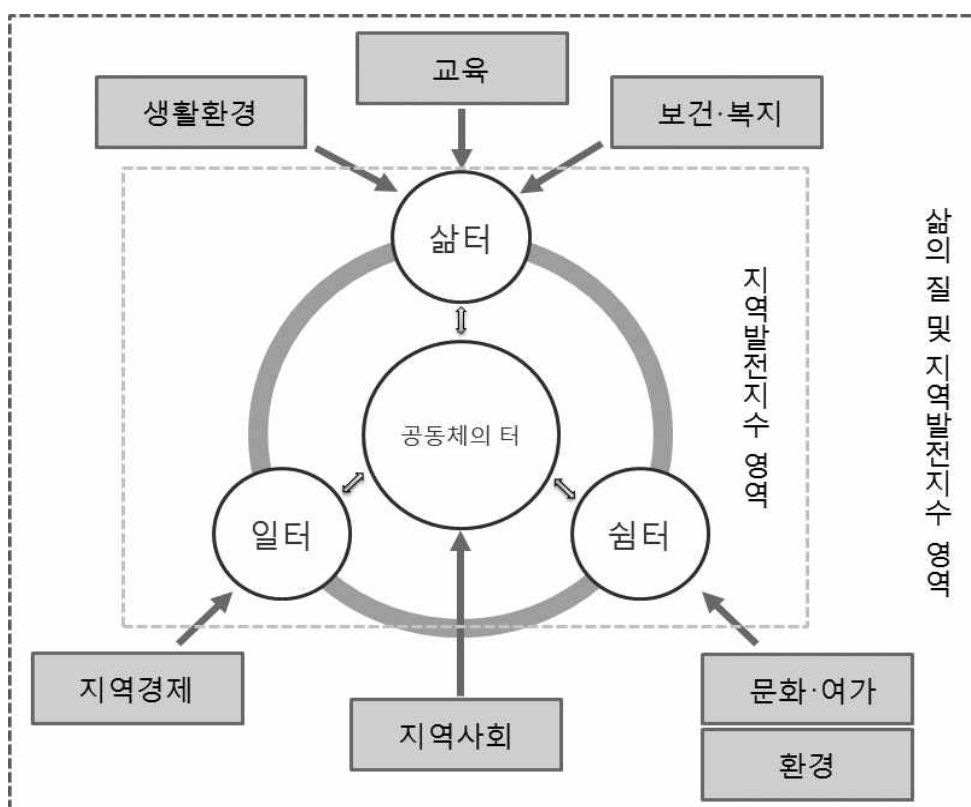
2.1.1. 부문의 구성

- 2014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2012년, 2013년과 마찬가지로 7대 부문 삶의 질 영역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 2012년도에는 부문별 초기 지표를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2013년도에는 이전 연도의 부문별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부문을 구성하는 각 지표들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 7대 부문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 역량 강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보건·복지 증진’, ‘문화·여가여건 개선’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지역발전지수’⁶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질에 관련되는 7대 정책 부문에 맞춘 7개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다(그림 2-2).
 - 생활환경: 주거, 생활 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부문
 - 지역경제: 일자리, 소득 관련 부문
 - 지역사회: 사회 활력과 성장 잠재력 관련 부문
 - 교육: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
 - 환경: 쉼터로서의 지역

6 지역발전지수(RDI: Region Development Index)는 시·군별 발전 수준과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송미령 외, 2012).

- 보건·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별로 지표를 구분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그림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개념 영역



출처: 송미령 외, 2013.

2.1.2. 부문별 후보 세부지표 갱신

- 2013년도에는 부문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진 회의, 통계 가용성 여부 조사 등을 통해 7대 삶의 질 영역에 관련된 62개 후보지표를 선정하였음. 후보 지표들을 전문가 설문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24개 세부지표로 최종 선정하였다.

※ 2013년 세부 지표 선정 방법

- 연구진 회의, 통계 가용성 여부 조사 후 후보지표를 선정
 - 후보지표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이상의 적합 값을 갖는 지표, 부문별 평균값 이상을 갖는 지표, 부문 내 공분산을 갖는 지표 제거를 통해 최종 세부지표를 산출
- 2014년도 세부지표는 2013년 세부지표를 승계하여 각 통계자료를 최신 자료로 갱신하였다.
 - 7대 부문 24개 지표와 갱신한 통계 자료의 목록은 <표 2-1>과 같다.
 - 노후주택비율을 계산하는 데에는 주택의 경과년수가 필요하지만 새롭게 조사된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2-1.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및 갱신 여부

구분	지표	내용	비고
보건 · 복지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인 수/인구)×1,000 • 의료인: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갱신
	1km ² 당 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 수/시·군 면적)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갱신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5세 미만))×1,000	갱신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 기관 전문인력 수	•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65세 이상인구)×1,000	갱신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	•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원 수/인구)×1,000	갱신
교육	1km ² 당 학교 수 (초·중·고·특수학교)	• 총 학교수(초·중·고·특수학교)/시·군 면적	갱신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갱신
	대학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4년제, 2년제 포함)/졸업자 수)×100	갱신
생활 환경	노후주택 비율	•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하수도 보급률)/2	갱신
지역 경제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	• (생활서비스 종사자수/인구)×1,000 • 생활서비스: 슈퍼마켓, 약국, 목욕탕,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갱신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 표본조사	갱신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 (총 사업체 종사자 수/경제활동인구)×1,000	갱신
	1인당 지방소득세	•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표 명칭 변경	갱신
문화 · 여가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갱신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	• 공원: 도시공원(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갱신
환경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 생활폐기물 배출량 / 인구 • 생활폐기물: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갱신
	1km ²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시·군 면적(km ²)	갱신
지역 사회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총 인구)×100	갱신
	인구 1천 명당 순인구이동	• (순인구이동/인구)×1,000 • 순인구이동: 전입인구-전출인구	갱신
	전출률	• (지역 외부로 이동 인구/인구)×1,000	갱신
	연평균 인구 성장률	• (당해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등록인구 포함)	갱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자살자 수/인구)×100,000	갱신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생성을 위한 부문별 가중치 산출

2.2.1. 부문별 가중치 산출 방법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7개 부문별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 2014년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구성하는 7대 부문과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추가된 ‘안전 부문’을 포함하여 8개 영역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을 1위~3위까지 조사하였다.
 - 가중치 산정 시 지난 2012년, 2013년 지수 부문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 부문을 제외시켜 다시 2위까지의 중요도로 재순위화 하였다. 즉, 안전 부문을 1, 2순위로 응답하고 다른 부문을 2위, 3위 등으로 응답한 사람이 있다면 안전 부문을 제외시키고 다른 부문의 응답치를 1위, 2위의 상위 응답치로 치환하였다.
 - 전국 읍·면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총 1,168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012년과 2013년에는 가중치 산출을 위해 쌍대비교법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에는 순위다중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쌍대비교법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부문의 수(n)의 $n(n-1)$ 개의 설문문항이 요구되며, 응답자가 매우 일관성 있는 응답을 제시해야 한다. 설문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이유로 보통 소수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 순위다중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면 현실감 있게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쉽게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2.2. 부문별 가중치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2014년 각 부문의 가중치를 보면 이전 연도에 비해 보건·복지 부문의 가중치 값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에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2013년에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이다.
 - 2014년에는 주민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문인 보건·복지 부문과 지역경제 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2-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구 분	보건·복지	교육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	지역사회	안전
2012년	0.193	0.166	0.156	0.187	0.091	0.092	0.115	-
2013년	0.149	0.168	0.155	0.164	0.083	0.155	0.126	-
2014년	0.308	0.106	0.149	0.185	0.079	0.061	0.112	-
2014년 (안전 포함)	0.248	0.091	0.131	0.163	0.078	0.060	0.101	0.126

- 2013년의 가중치는 전문가 집단과 주민 집단의 의견이 섞여 있는 가중치 값이다. 2014년에는 주민의 중요도만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2013년의 가중치 중 농어촌 주민이 제시한 중요도의 가중치와 비교하였다.

표 2-3. 주민 의견만 반영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구 분	보건·복지	교육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	지역사회
2013년	0.144	0.168	0.153	0.161	0.078	0.168	0.128
2014년	0.308	0.106	0.149	0.185	0.079	0.061	0.112

- 먼저, 2013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부문별 가중치와 2013년의 가중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2013년에는 교육, 환경, 지역경제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4년도에는 보건·복지, 지역경제, 생활환경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 이는 1년간 사회여건이 변한 점, 응답자의 구성이 달라진 점 등에 따라 변화가 발생했을 수 있으며 2014년에는 쌍대비교가 아니라 순위가중에 의한 방식으로 가중치가 반영되어 나타났을 수도 있다.

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생성

3.1. 부문별 세부지표의 표준화

- 농어촌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7개 부문 24개 세부지표)들의 측정치 단위가 서로 상이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측정치 단위를 같은 척도로 변환 하는 적절한 표준화 방법의 선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3.1.1. 부문별 세부지표에 선형 변환 표준화 적용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세부지표들은 서로 다른 측정값과 스케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지수로 합산하는 과정에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 2013년도 연구부터는 z-score를 이용한 표준화 방법이 아니라 선형 변환 표준화를 활용하고 있다.

- z-score 표준화 방법은 평균이 0인 음수와 양수를 갖는 분포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경우 각 지표 값들을 합산하게 되면 양수와 음수 값이 상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에는 표준화된 최하 음수 값만큼 양수화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지표는 최대, 최소 범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합산 시에 역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z-score의 표준화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연구부터는 간명하고 적용이 용이한 선형 변환 방법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 선형 변환 방법은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댓값 표준화(1),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댓값 표준화(2) 방식 등이 있다.
- (1) $x'_{ij} = \frac{x_{ij} - x_j^{\min}}{x_j^{\max} - x_j^{\min}} \times 100$ 혹은 (2) $x'_{ij} = \frac{x_j^{\max} - x_{ij}}{x_j^{\max} - x_j^{\min}} \times 100$
- 표준화된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24개 세부지표 중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영향을 가지는 지표로 노후주택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kg/일),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ton/km²), 고령화율(%), 전출률(%), 자살률(%) 등에는 (2)의 표준화 방식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지표에는 (1)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 표준화 값의 '100'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100점이 아니라, 각 지표별로 가장 좋은 수치를 가진 지역을 100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즉, 다른 지역들의 표준화된 수치의 의미는 가장 좋은 지표값을 지닌 시·군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관련한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3.2. 부문별 지수 산출 결과

- 각 부문별 세부지표를 합산하여 부문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산출하였다. 각 부문별 세부지표는 (1/부문별 지표 수)의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결과 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부문별 가중치 순위에 따라 기술하고 각각 시와 군별로 지숫값 상위 10위를 기술하였다.

3.2.1. 보건·복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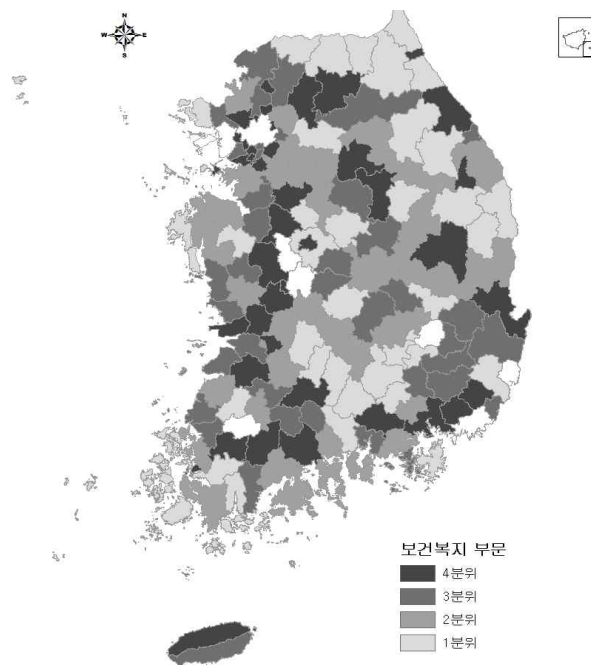
- 보건·복지 부문 지수는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1km²당 의료기관 수,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 등으로 구성된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시는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기도 부천시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건·복지 부문에서 지수가 가장 높은 군은 전라남도 화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 목포시, 공주시의 경우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화순군의 경우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최상위권에 들고 있다.

표 2-4. 보건·복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화순군
충청남도 공주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연천군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청양군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함평군
경기도 구리시	충청북도 옥천군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부안군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기도 의정부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충청남도 서천군

- 보건·복지의 지역별 분포도인 <그림 2-3>을 보면 보건·복지 지수가 낮은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강원도의 영동 지역과 전라도 내륙 일부 지역이다.

그림 2-3. 보건·복지 부문 4분위 지도



3.2.2. 교육 부문

- 교육 부문 지수는 1km² 당 초·중·고등학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4년제 및 2년제 대학 진학률의 지표로 구성된다.
- 교육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역은 충북 괴산군, 경기도 부천시, 인천 옹진군, 경상북도 군위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으로 나타났다(표 2-5).
- 교육 부문 지수가 높은 곳은 주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지만 2014년 지수에서는 괴산군, 옹진군, 군위군 등 군 지역의 지수가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육 부문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강원도 및 경상도 지역에 분포한다(그림 2-4).

그림 2-4. 교육 부문 4분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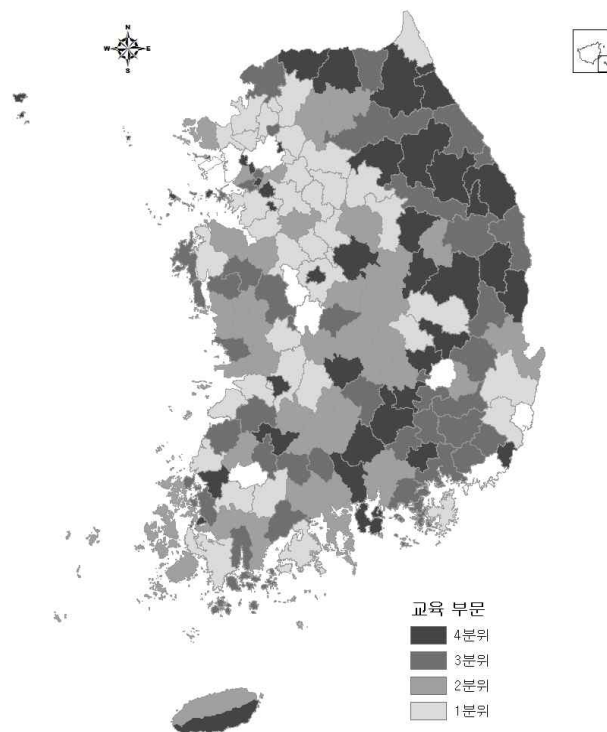


표 2-5. 교육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전라남도 목포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기도 구리시	경상북도 울릉군
경기도 오산시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기도 광명시	경상남도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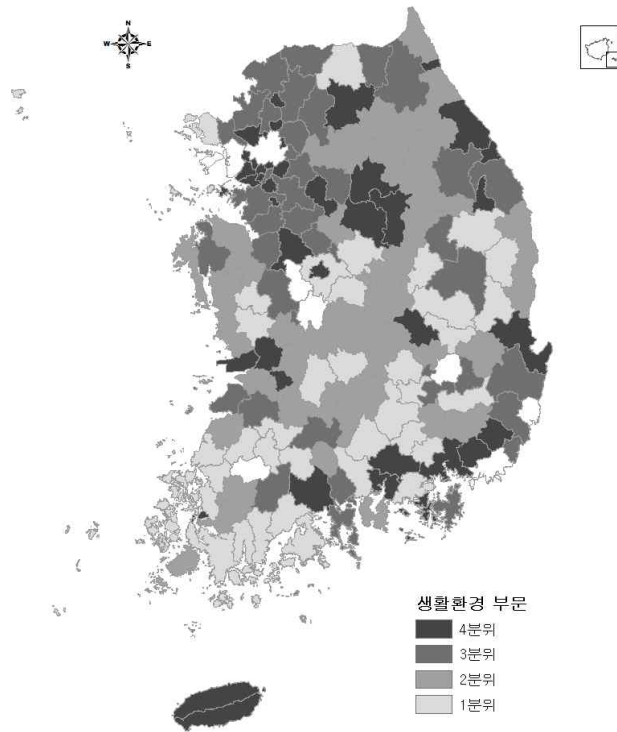
3.2.3. 생활환경 부문

- 생활환경 부문의 구성은 노후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인구 천 명당 생활 서비스 종사자 수이다.
- 기초 생활인프라와 관련된 이 지수의 분포 값을 보면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강원도 속초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충청북도 증평군, 부산 기장군, 화순군 등의 생활환경 부문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일반시나 도농통합시에서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에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및 2013년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여전히 농어촌의 열악한 기초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표 2-6. 생활환경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북도 증평군
강원도 속초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기도 구리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안양시	전라북도 부안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강원도 인제군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철원군

그림 2-5. 생활환경 부문 4분위 지도



3.2.4. 지역경제 부문

- 지역경제 부문 지수는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자주도 등의 지표이며 이를 표준화하고 합산하여 지수화하였다.
- 지역경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과천시 등이었다. 이러한 상위 지역들은 지난 3여 년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또한 상위 군 지역의 경우도 청원군의 경우가 미세하게 하락했으나 대부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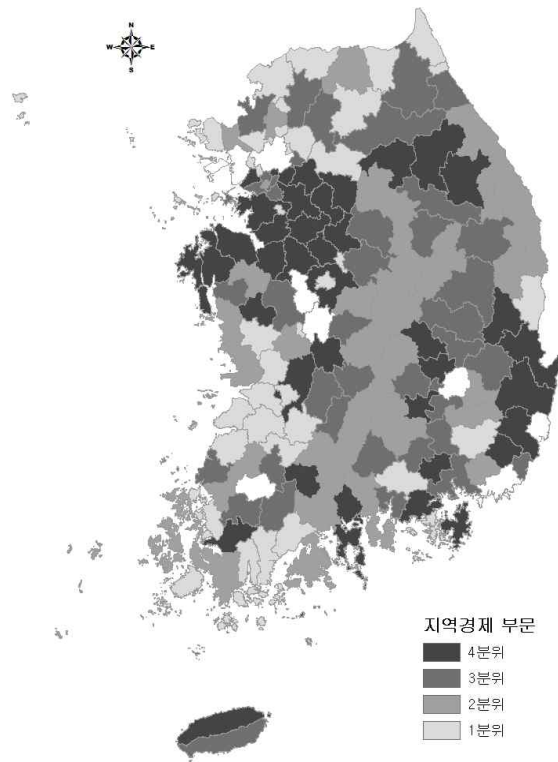
표 2-7. 지역경제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영암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경기도 과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거제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원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정선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기도 이천시	경상남도 함안군
충청남도 당진시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북도 고령군

○ 지역경제 부문 지수를 4분위화한 <그림 2-6>을 보면 지수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2012년, 2013년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 수도권 지역과 남동임해공업지역, 제주 지역에 상위 시·군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특징적인 점은 강원도 내륙에 있는 정선, 평창, 횡성 등이 상위 25%로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2-6. 지역경제 부문 4분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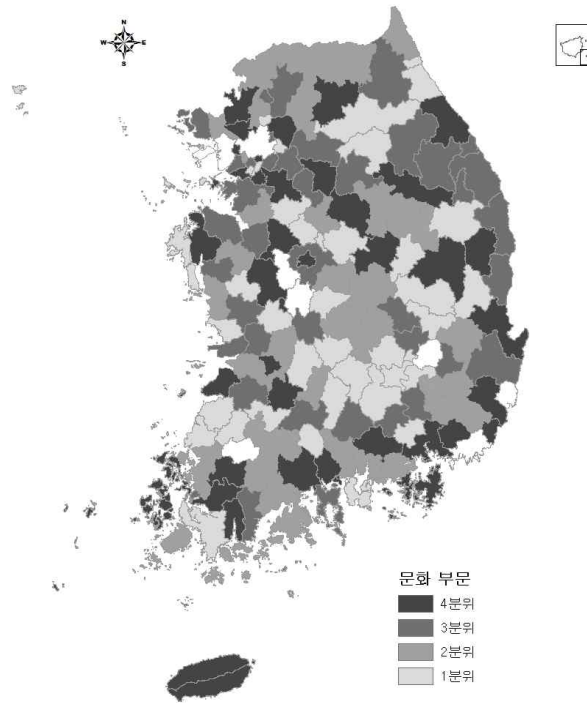
3.2.5. 문화·여가 부문

- 문화·여가 부문은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면적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 문화·여가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등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기장군, 영월군, 부안군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표 2-8). 그러나 군 지역은 전국의 평균적 수준보다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문화·여가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신안군
경기도 과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강진군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영암군
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임실군
경기도 고양시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의령군

그림 2-7. 문화·여가 부문 4분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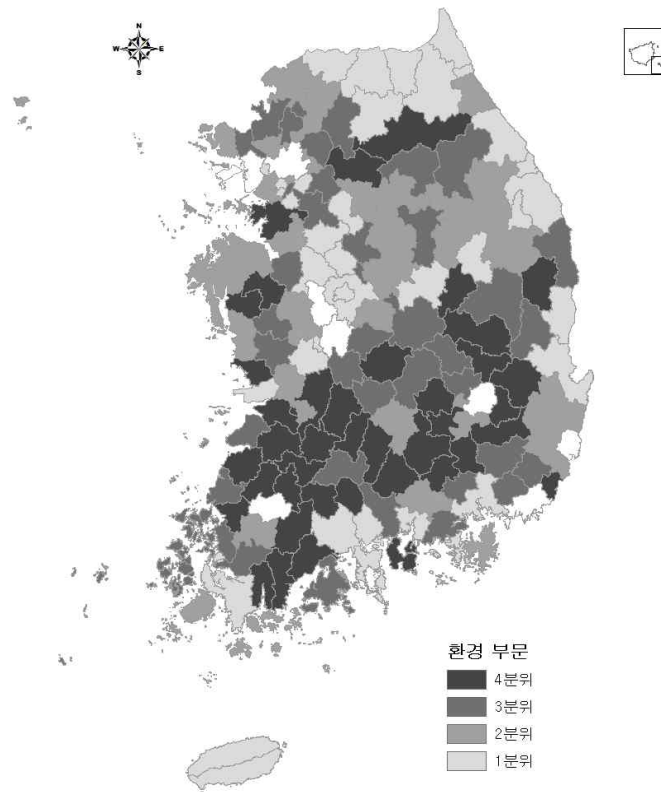
3.2.6. 환경 부문

- 환경 부문 지수는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지표로 구성되고 그 값이 낮을수록 지수 값이 높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 환경 부문 지수의 분포는 대체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환경 부문 지표의 상위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 환경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값을 지닌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 모두 군지역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지역들이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다(표 2-9).

표 2-9. 환경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	상위 10개 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기도 동두천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곡성군

그림 2-8. 환경 부문 4분위 지도



3.2.7. 지역사회 부문

- 지역사회 부문은 고령화율, 인구 천 명당 순인구이동률, 전출률, 연평균 인구 성장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 이 중 고령화율, 전출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역수의 개념으로 다른 지표들과 합산된다. 즉, 젊고, 지역의 인구 유출이 낮으며, 자살률이 낮은 방향으로 높은 점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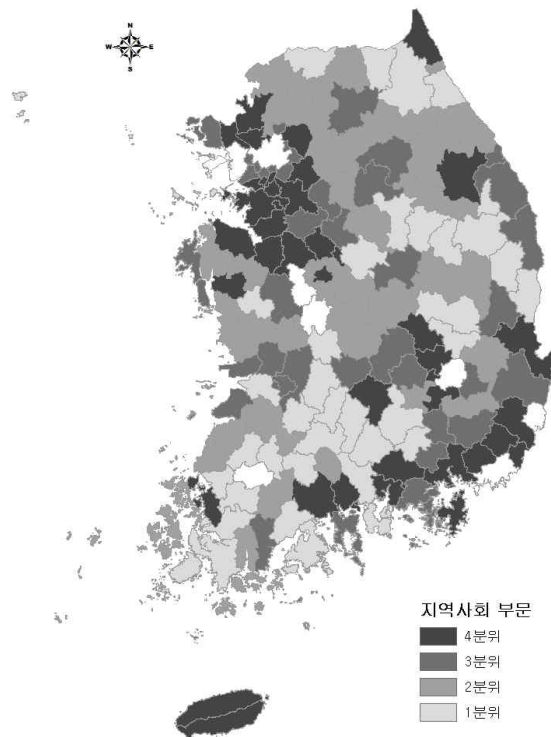
-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상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경기도의 일 반시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지역사회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가 인구의 역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 군 중 상위 지수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이었다(표 2-10).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사회적 안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지수는 주로 수도권과 부산 및 대구 주변 시·군 등에서 높게 산출되었다. 더불어 광주 및 대전 주변 시·군에서는 광역시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부문의 점수가 낮은 점도 지난해와 유사하다(그림 2-9).

표 2-10. 지역사회 부문 지수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군	상위 10개 시·군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기도 의왕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양산시	전라남도 무안군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김해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광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오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경기도 용인시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수원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도 고성군

그림 2-9. 지역사회 부문 4분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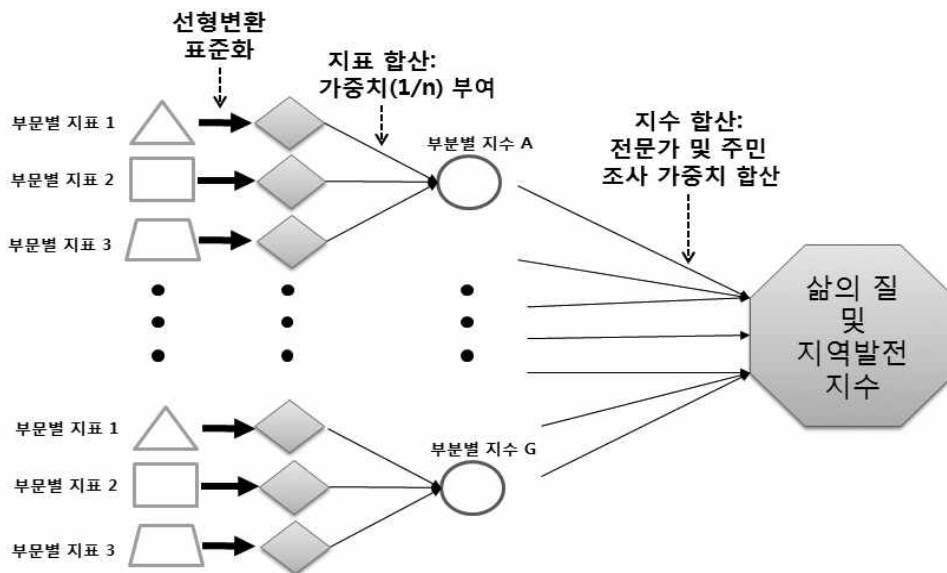


3.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종합

3.3.1. 부문별 지수의 합성을 통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산출

- 최종적인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부문별 지숫값에 놓여
 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그림 2-10).
- 각 부문별 지표들은 선형변환을 통한 표준화 후 각 부문별 지수로 합산
 한다.
- 각 부문별 지수는 다시 주민 조사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가 곱해져 합산되
 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합산된 결과가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이다.

그림 2-10.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산출 과정



출처: 송미령 외, 2013.

3.3.2. 부문 지수 간의 상관관계

- 농촌 지역에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부문별 상관관계를 보면 대부분 0.6 이하의 약한 상관관계이거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부문이 다른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수의 구성이 독립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11).

표 2-11. 부문 지수 간 상관관계

구 분	보건 복지	교육	생활 환경	지역 경제	문화	환경	지역 사회	삶의 질 지수
보건 복지	1	-.223**	.544**	-.123	.299	-.060	.185*	.580**
교육		1	-.347**	-.263**	-.075	.014	-.244**	-.194*
생활 환경			1	.158	.478**	-.383**	.528**	.790**
지역 경제				1	.048	-.102	.237**	.371**
문화					1	-.241**	.294**	.621**
환경						1	-.091	-.003
지역 사회							1	.657**
삶의 질 지수								1

주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주2: 일반시 제외

- 보건·복지는 생활환경, 지역사회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교육 부문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보건·복지 부문의 성과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는 있지만,

한정된 자원의 투입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교육 부문은 모든 부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 부문의 지수(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진학률)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생활환경은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부문과 양(+)의 상관관계로 삶의 질 및 지역 발전은 생활환경의 발전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경제는 지역사회와 양(+)의 관계를 지녀 지역사회를 젊고 활기차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부문 지수는 ‘생활환경’, ‘지역사회’, ‘보건·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 2013년도에는 ‘생활환경’, ‘교육’, ‘지역사회’ 순으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2012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부문은 ‘지역사회’였다.
- 생활환경 부문은 지속적으로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문은 다행히도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다. 때문에 생활환경의 개선은 삶의 질과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농어촌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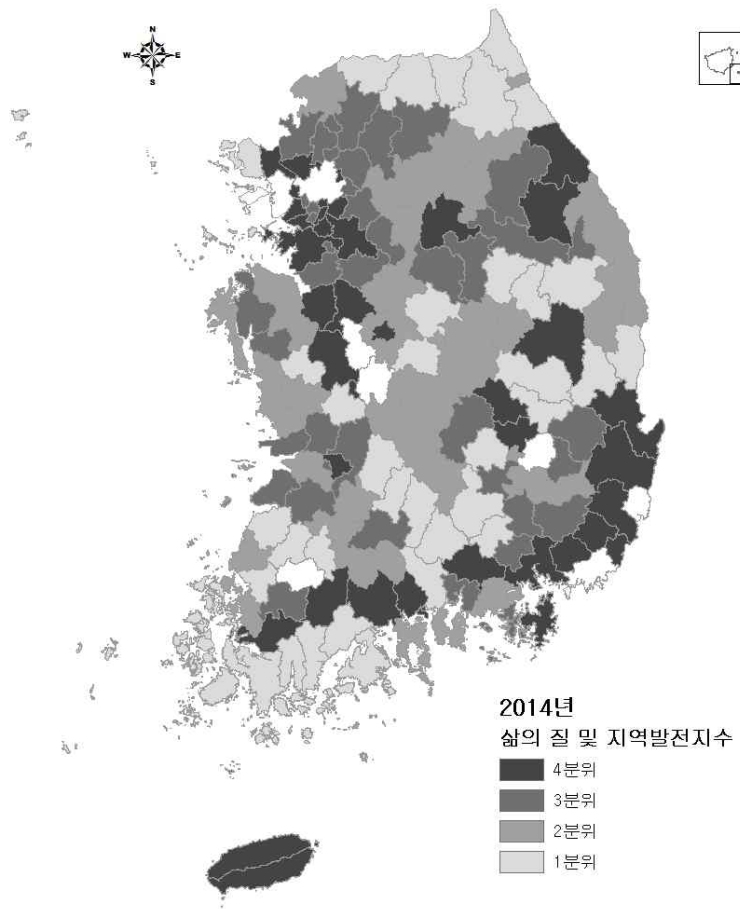
4.1. 종합 실태 분석

4.1.1.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의 분포

- 일반시를 제외한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시 지역일수록 종합 지수값이 높게 산출되었다(그림 2-11).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시·군에서 종합 지수값이 높게 산출되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상위 25%(35개 시·군)에는 도농통합시가 27개, 군은 2013년도 3개에서 증가하여 8개로 늘어났다. 이 때 군 지역은 기장군, 화순군, 울주군, 영암군, 칠곡군, 정선군, 완주군, 홍성군으로 나타났다.
 - ※ 상위 35개 시·군: 기장군, 제주시, 화성시, 김해시, 양산시, 구미시, 창원시, 서귀포시, 화순군, 용인시, 진주시, 포항시, 아산시, 계룡시, 거제시, 순천시, 공주시, 강릉시, 안동시, 울주군, 원주시, 영암군, 칠곡군, 광양시, 김포시, 경주시, 천안시, 정선군, 파주시, 사천시, 경산시, 완주군, 춘천시, 홍성군, 제천시
- 반면에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하위 25%(35개 시·군)에는 영주시, 논산시를 제외하고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 ※ 하위 35개 시·군: 웅진군, 해남군, 고성군, 울릉군, 봉화군, 의성군, 완도군, 함천군, 함평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화천군, 강화군, 군위군, 양구군, 장성군, 청양군, 영주시, 양양군, 의령군, 하동군, 영덕군, 진안군, 보은군, 괴산군, 보성군, 성주군, 함양군, 논산시, 장흥군, 고창군, 단양군, 장수군, 철원군

-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농어촌 시·군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 시·군 단위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지역 스스로 부족한 서비스 자원을 주변 지역과 함께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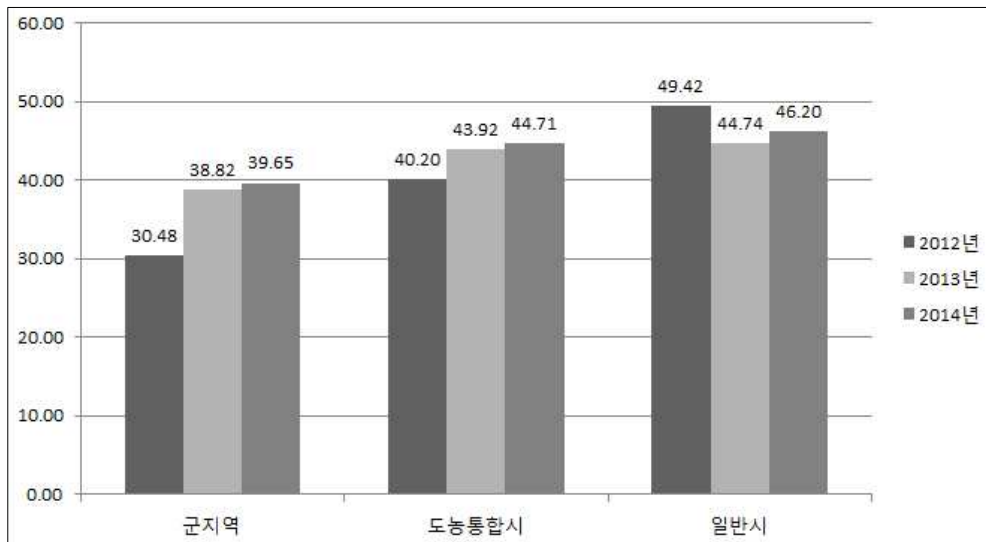
그림 2-11. 2014년 삶의 질 지역발전 지수 분포



4.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변화

-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산출해 온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년도 지수 값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지수 값을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각 연도의 각 지표 최대 값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의 지수로 그 수치의 크기가 절대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따라서 그 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정도가 직접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다.
 - 시기별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 값의 비교는 동일 시점만의 타 시·군을 비교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표의 최대값, 최소값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대략적인 상황에서의 시점 간 비교는 가능하다.
- 각 년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종합 지수를 보면 2012년에는 138개 시·군이 평균 36.43이었으며, 2013년에는 평균 41.38, 2014년에는 평균 42.29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의 <그림 2-12>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부터 군지역과 도농통합시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간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격차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시기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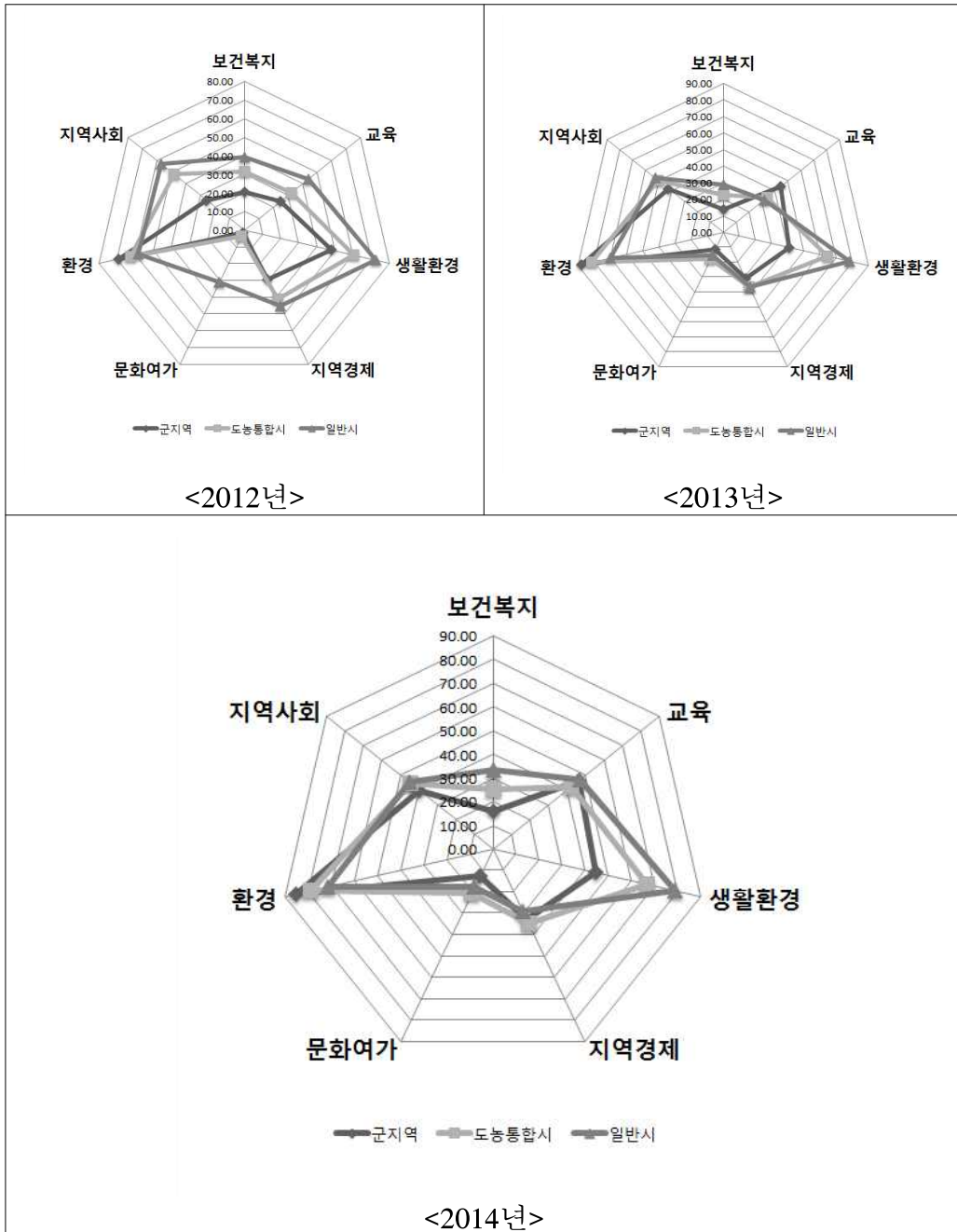
○ 부문별 지숫값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의 각 부문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12).

- 군지역의 환경 및 교육 부문은 일반시보다 역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환경의 경우는 일반시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는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

표 2-1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변화

부문	연도	군지역	도농통합시	일반시	일반시-군 차이	도농통합시-군 차이
보건·복지	2012년	20.55	31.56	39.30	18.75	11.01
	2013년	13.83	22.39	28.93	15.1	8.56
	2014년	15.88	25.26	33.29	17.41	9.38
교육	2012년	24.61	32.21	43.93	19.32	7.6
	2013년	44.35	33.85	31.60	-12.75	-10.5
	2014년	46.24	42.41	47.14	0.9	-3.83
생활환경	2012년	47.86	60.33	72.53	24.67	12.47
	2013년	41.15	64.71	78.24	37.09	23.56
	2014년	44.67	66.54	79.13	34.46	21.87
지역경제	2012년	29.26	41.14	45.09	15.83	11.88
	2013년	30.98	36.54	36.77	5.79	5.56
	2014년	33.05	34.74	28.87	-4.18	1.69
문화·여가	2012년	1.68	3.62	31.15	29.47	1.94
	2013년	11.45	17.98	15.17	3.72	6.53
	2014년	12.66	20.33	17.93	5.27	7.67
환경	2012년	69.30	62.82	58.51	-10.79	-6.48
	2013년	87.80	81.54	69.86	-17.94	-6.26
	2014년	85.13	79.01	71.74	-13.39	-6.12
지역사회	2012년	25.78	48.30	57.16	31.38	22.52
	2013년	42.15	50.42	52.60	10.45	8.27
	2014년	39.91	44.68	45.31	5.4	4.77

그림 2-13. 2012~2014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부문별 지수



5. 소결 및 시사점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로 본 제2기 삶의 질 향상 정책 평가는 양호한 편

- 2014년은 제2기 삶의 질 향상 계획이 종료가 되는 해이다. 부문별 지수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지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환경, 보건·복지 등 삶의 질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발굴은 아직도 필요한 실정

- 지난 3여 년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세부 부문 중 생활환경, 보건·복지 부문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으나 다른 부문에 비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차별적인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라서 주거 부문, 의료 서비스 부문, 보건·복지 부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발굴이 요구된다.

■ 군 지역 안에서도 지역경제 및 보건·복지 분야 성장의 격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

- 지역 경제 및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하위 군과 상위 군 간의 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성장하고 있는 군과 그렇지 못한 군의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고 저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대두

- 지난 3년간 측정된 삶의 질 및 지역 발전 지수의 성과는 크게 시·군의 발전 정도 측정 및 시·군 간 지역 발전의 비교이다. 하지만 지수로 측정된 정책적 제안이 실제 정책 발굴이나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지수는 단지 측정 지표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 따라서 지수 체계를 유지한다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맞추어 기준점(baseline) 설정을 하고, 기준시점 이후 지역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지표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시계열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여야 하며 성과지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제 3 장

마을패널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⁷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농어촌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삶의 질 여건을 진단했다.
 -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질 여건, 그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및 정주지(시·군, 마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 농어촌 마을의 입지적 요인, 마을의 인구(가구) 규모, 정주체계 성격 등에 따른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 동 전문지원기관 위탁업무에서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시·군 지자체 단위로 삶의 질 여건(종합적 지수) 분석을 실시하지만, 개별 농어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

7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조사는 매년 동일한 마을들에 대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에 응답하는 주민들이 매년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패널조사는 아니지만, 해마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한 인식을 파악하는 시계열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한다. 따라서 살고있는 마을과 지역(시·군)의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체감되는 삶의 질 만족도를 도출하고자 했다.

※ 마을패널 조사 추진 경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위탁업무의 일환으로서, 2012년부터 마을패널 조사를 시작함(10개 마을 대상)
- 2012년 10개 마을에서 2013년에는 20개 마을로 조사를 확대함
- 2014년에도 전 년도와 동일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2014년 조사에서 주민의 삶의 질 중요도와 만족도는 2015년 이후 실시될 3차 삶의 질 계획의 ‘안전’ 부문이 반영됨

2. 조사 대상 마을

- 2014년에는 2013년도에 조사한 마을과 동일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그림 3-1, 표 3-1 참조).
- 시·군의 전반적 생활 여건을 나타내는 삶의 질 지역발전지수를 참고적으로 활용하되, 마을단위의 정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들을 고려하여 전국의 총 20개 농어촌 마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① 각 도별로 시·군이 고루 포함되도록 편성하되, ② 2013년도에 이루어진 마을 선정 작업에서는 다음의 마을단위 정주 여건을 고려했다.⁸

8 2013년도에 조사 마을을 선정할 때 마을 단위의 다양한 정주 여건을 포함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설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미령 외(2013)를 참고.

* 인구(가구) 변화, 정주체계상 성격(중심지마을, 배후마을), 읍·면사무소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등 정주체계상 중심지로의 접근성 등

○ 조사 대상 마을의 개요는 <표 3-1>과 같다.

- 경기도 2, 강원도 2, 충청북도 2, 충청남도 3, 전라북도 3, 전라남도 2, 경상북도 2, 경상남도 3, 제주 1
- 도농통합시 5개 마을, 군 15개 마을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2014년 기준) 상위 시·군 1개 마을, 중위 시·군 14개, 하위 시·군 5개 마을
- 인구(가구수) 변화⁹: 증가 마을 7개, 유지 마을 6개, 감소 마을 7개
- 정주체계상 마을 성격¹⁰: 중심지마을 6개 마을, 배후마을 14개 마을
- 시·군청 소재지로의 접근성: 15분 이하 마을 6개, 15분~30분 마을 8개, 30분 이상 마을 6개

[기준1] 마을의 인구 변화: 가구수 증가, 가구수 유지, 가구수 감소

* 2005년, 2010년 지역조사 가구수 자료

[기준2] 정주체계상 마을의 성격: 중심지마을, 배후마을

* 2010년 지역조사의 읍·면사무소 소재지 마을 여부, 거리 및 소요시간 자료

[기준3] 마을에서 지역 내 소재지로의 접근성

*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

[기준4] 마을에서 인근 중심 도시로의 접근성

* 인근의 중심 도시까지의 소요시간

[기준5] 마을개발 사업 및 관련 활동 추진

* 농촌개발사업 관련 자료, 2010년 지역조사의 도농교류 활동 자료 등

9 가구수 변화는 2005년과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의 총가구수 규모를 비교했다(규모별 구간(1~10)을 기준으로 파악한 변화).

10 정주체계상 마을 성격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기준(읍·면사무소 소재 여부)으로 하되, 진주시 삼곡리(문산읍사무소는 삼곡리에 소재), 청송군 진안1리(진보면사무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진안2리에 소재하지만 진안1리회관과 약 400m 거리에 위치)는 중심지마을로 구분했다.

그림 3-1. 조사 대상 마을



표 3-1. 조사 마을의 개요

도	시·군 유형	'14년 지수 순위	시·군	읍·면	행정리	가구수 변화 ('05-'10)	정주체계 성격
경기도	군	중위 (84)	연천군	청산면	초성2리	감소	중심지마을
강원도	도농 통합시	중위 (102)	화천군	화천읍	풍산2리	감소	배후마을
강원도	군	중위 (102)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감소	배후마을
충청북도	군	중위 (74)	제천시	백운면	평동1리	감소	중심지마을
충청남도	도농 통합시	중위 (96)	홍성군	홍성읍	오관1리	증가	중심지마을
충청남도	군	중위 (96)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유지	배후마을
전라북도	군	중위 (87)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유지	배후마을
전라북도	군	중위 (58)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유지	배후마을
전라북도	군	중위 (58)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유지	배후마을
전라남도	군	중위 (61)	화순군	동면	오동리	증가	배후마을
경상북도	도농 통합시	하위 (152)	청송군	진보면	진안1리	유지	중심지마을
경상북도	도농 통합시	하위 (152)	청송군	파천면	신흥1리	감소	배후마을
경상남도	도농 통합시	상위 (36)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증가	중심지마을
제주도	군	중위 (57)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감소	배후마을
충청남도	군	중위 (99)	논산시	별곡면	대덕리	감소	배후마을
경기도	군	중위 (91)	양평군	청운면	용두1리	증가	중심지마을
충청북도	군	중위 (66)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증가	배후마을
전라남도	군	하위 (159)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증가	중심지마을
경상남도	군	하위 (153)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증가	배후마을
경상남도	군	하위 (153)	남해군	남면	홍현1리	유지	배후마을

3. 조사 내용과 방법

3.1. 조사 항목¹¹

삶의 질 만족도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행복감)
- 정주 여건을 고려한 삶의 질 만족도
- 정주지(마을 및 시·군)의 향후 발전에 대한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중요도(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 7대 부문 + 안전: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도입될 ‘안전’ 부문을 추가하여 조사

8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등 8대 부문별로 2~4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 2013년도 조사에서는 안전을 제외한 7대 부문에 대하여 조사

이주 의향 및 이유

- 향후 5년 내의 이주 의향
-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개방형 질문)

11 설문 문항은 <부록 3>의 ‘2014년 농어촌 마을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구성, 가구 소득, 자가용 차량 유무
- 마을 거주 기간
- 귀농·귀촌 여부(귀농·귀촌한 경우, 년 수)
- 마을 일(행사나 모임)에 대한 참여도

○ 특히, 2014년 조사에서는 만족도 질문 시 만족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는 11점 척도를 사용했다.

<참고> 만족도 응답 척도

- 2012년, 2013년 조사에서는 1~5점 사이에서 응답(5점 척도)하도록 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0점~10점 사이에서 응답(11점 척도)하도록 함
- 분석 시에는 0~3점은 ‘부정적’, 4~6점은 ‘보통이다’, 7~10점은 ‘긍정적’ 응답인 것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1점	2점	3점	4점	5점						
2012년, 2013년 조사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2014년 조사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부정적(불만족)			보통			긍정적(만족)				

3.2. 조사 방법 및 기간

○ 마을 조사는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 간 전화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이 저조한 일부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방문 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¹²

- 조사전문기관에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진행했고, 응답률이 저조한 마을은 조사전문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수행했다.

○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679명 주민의 응답을 받았다.¹³

표 3-2. 마을별 조사 응답 현황

조사 마을	보조 조사 마을	전화 조사 (명)	면접 조사 (명)	조사 전체 (명)	마을별 응답 비중(%)
연천군 청산면 초성2리	초성리 전체, 양원리	21	-	21	3.1
화천군 화천읍 풍산2리	풍산리 전체, 우장동마을	26	6	32	4.7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평리	22	-	22	3.2
제천시 백운면 평동1리	평동리 전체, 원서마을	34	-	34	5.0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오관리 전체	21	20	41	6.0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금평리	16	20	36	5.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동곡리	35	-	35	5.2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경천리	34	-	34	5.0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	10	20	30	4.4
화순군 동면 오동리	-	17	21	38	5.6
청송군 진보면 진안1리	진안리 전체	48	-	48	7.1
청송군 파천면 신흥1리	신흥리 전체	9	21	30	4.4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이곡리	42	-	42	6.2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신흥리 전체	28	-	28	4.1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	11	20	31	4.6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용두리 전체	41	-	41	6.0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도당리 전체	9	25	34	5.0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	42	-	42	6.2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	19	11	30	4.4
남해군 남면 홍현1리	홍현리 전체	21	9	30	4.4
전 체		506	173	679	100.0

12 농어촌마을 주민 대상의 정주민족도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수행했다.

13 중·대규모 마을의 경우 30~50명을 조사하고,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최소 20명 이상이 확보되도록 조사했다. 거주 가구 수가 적어 유효 표본 확보가 어려운 마을의 경우, 가장 인근의 마을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했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4.1.1. 2014년 조사 현황

- 60세 이상 응답자가 70.1%로 가장 많고, 50대 응답자도 16.6%로 비교적 많음. 50~60대가 전체 응답자의 약 8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응답자의 7.7%, 20~30대가 5.6%를 차지했다.

표 3-3. 응답자 연령대

(단위: %)

구 분	20~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 체
응답 비율	5.6	7.7	16.6	70.1	100.0

-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무직/퇴직/기타인 경우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부의 응답 비율이 16.5%로 나타났다.

표 3-4. 응답자 직업

(단위: %)

구 분	농·임·어업	무직·퇴직·기타	주부	사무직·생산직	자영업	전 체
응답 비율	53.5	19.6	16.5	6.2	4.3	100.0

-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가구(51.7%)였으며, 18.9%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였다. 홀로 사는 독신가구가 18.0%였다.

표 3-5. 응답자 가족구성

(단위: %)

구 분	응답 비율	구 분	응답 비율
부부	51.7	부부+(시)부모	3.4
부부+자녀	18.9	조부모+손자녀	1.3
독신	18.0	기타	0.7
조부모+부부+손자녀	6.0	전 체	100.0

-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6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약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년을 넘지 않지만 40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26.8%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약 94%는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을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응답자 마을 거주기간

(단위: %)

구 분	30년 이하	31~40년	41~60년	61년 이상	전 체
응답 비율	2.8	3.5	26.8	66.9	100.0

- 응답자의 14.4%는 귀농·귀촌자였다.

표 3-7. 응답자 귀농·귀촌 여부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전 체
응답 비율	14.4	85.6	100.0

4.1.2. 전년도 조사와의 비교

- 전년도인 2013년 조사와 2014년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및 응답자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8. 응답자 성별 비교(2013~2014)

(단위: 명)

조사 연도	남자	여자	전 체
2013년	271 (44.7%)	335 (55.3%)	606 (100.0%)
2014년	322 (47.4%)	357 (52.6%)	679 (100.0%)

p=0.332

표 3-9. 응답자 연령대 비교(2013~2014)

(단위: 명)

조사 연도	19세~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 체
2013년	347 (3.5%)	117 (6.9%)	32 (15.5%)	26 (74.1%)	84 (100.0%)
2014년	360 (5.6%)	209 (7.7%)	36 (16.6%)	29 (70.1%)	45 (100.0%)

p=0.225

- 응답자 소득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2013년 조사에서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소득계층이 57.3%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53.0%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2013년 조사에서 19.3%였던 데 비해, 2014년 조사에서는 30.8%로 크게 높아졌다.
 - 이와 같은 응답자 소득수준의 차이는 만족도 관련 질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응답자 소득수준 비교(2013~2014)

(단위: 명)

조사 연도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4천 만원 미만	4천만 원 이상	모름/ 무응답	전 체
2013년	347 (57.3%)	117 (19.3%)	32 (5.3%)	26 (4.3%)	84 (13.9%)	606 (100.0%)
2014년	360 (53.0%)	209 (30.8%)	36 (5.3%)	29 (4.3%)	45 (6.6%)	679 (100.0%)

p=0.000

- 응답자의 가족구성에서도 전년도 조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독신 가구 비율이 2013년 22.3%로 상당히 높았던 데 비해, 2014년 조사에서는 18.0%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도 2013년 11.7%에서 2014년에는 16.6%로 4.9%p 정도 높아졌다.

표 3-11. 응답자 가족구성 비교(2013~2014)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독신	135	22.3%	122	18.0%
부부	306	50.5%	348	51.3%
부부+미혼자녀	71	11.7%	113	16.6%
부부+기혼자녀	16	2.6%	10	1.5%
조부모+부부+손자녀	28	4.6%	37	5.4%
조부모+손자녀(조손가족)	3	0.5%	9	1.3%
부부+(시)부모	11	1.8%	23	3.4%
기타	36	5.9%	4	0.6%
부부+형제	-	0.0%	2	0.3%
본인+자녀	-	0.0%	5	0.7%
본인+형제	-	0.0%	1	0.1%
부부+자녀+부모+조카	-	0.0%	1	0.1%
부부+자녀+손자+부모	-	0.0%	2	0.3%
부모+미혼자녀+손자	-	0.0%	1	0.1%
무응답	-	0.0%	1	0.1%
전 체	606	100.0%	679	100.0%

p=0.000

4.2. 농어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

: 행복감, 정주만족, 향후 정주지 발전에 대한 인식

-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등 4개 문항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만족도를 질문했다.
- 2014년 조사에서는 포괄적 만족감(‘나는 지금 행복하다’)과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를 묻는 두 세 부문항 모두에서 40~50%의 응답자가 긍정적(7~10점 부여)으로 답했다.
 - ‘보통’(4~6점 부여)으로 응답한 경우도 40~50%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고, 부정적(0~3점 부여)으로 답한 경우는 9%대 수준이다.

표 3-12. 만족도: 행복감, 정주여건 만족도(2012~2014년)

(단위: %)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전 체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2년	19.7	44.6	35.7	100
	2013년	14.8	46.3	38.9	100
	2014년	9.6	49.5	40.9	100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3년	17.8	39.9	42.3	100
	2014년	9.5	40.9	49.6	100

주1: 조사 응답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잘 모름’)한 경우를 제외한 결과임.

주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2013년부터 도입한 세부문항으로 2012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음.

- 마을 주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 비율이 수치상으로는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연도 조사의 표본오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⁴

- 더욱이 과거 조사에서는 응답 시 1~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5점 척도)하도록 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0점~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11점 척도)하도록 하여, 그러한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는 불가하다.

그림 3-2. 행복감 응답 결과(2012~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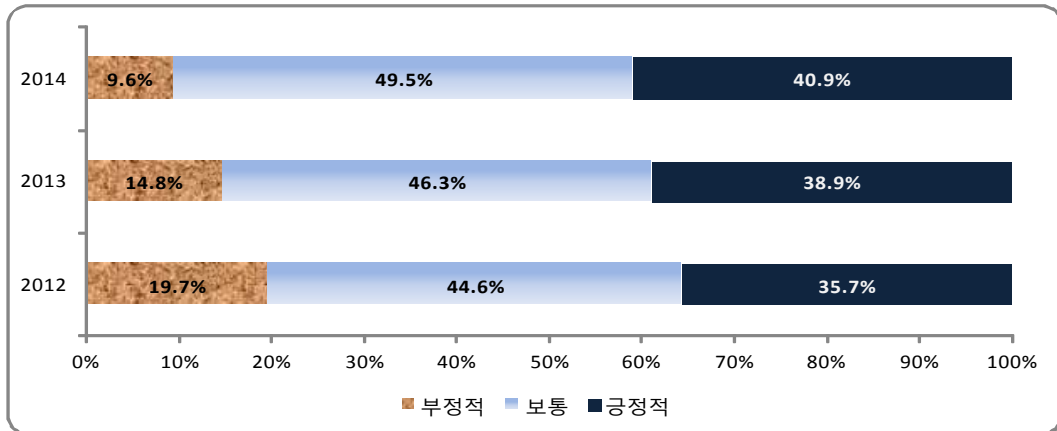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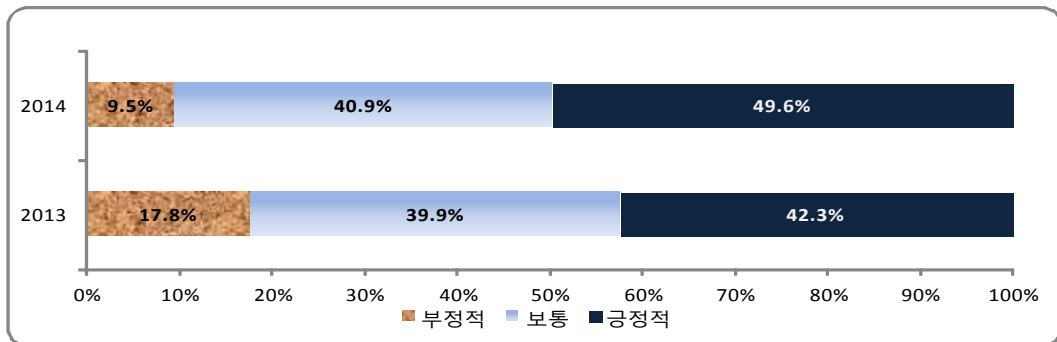


그림 3-3. 정주여건 만족도 응답 결과(2012~2014년)



14 '나는 지금 행복하다' 문항에 대한 무응답자를 포함할 경우, 2014년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은 9.4%, '보통'은 48.3%, 긍정적 응답은 39.9%, '잘 모름'은 2.4%이다. 2014년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은 14.0%, '보통'은 43.9%, 긍정적 응답은 37.0%, '잘 모름'은 5.1%이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013년 조사는 $\pm 3.8\%$ p, 2014년 조사는 $\pm 3.59\%$ p이다.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의 4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약 28%의 응답자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들(24%)이 많았다.
- 특히, 거주 시·군 및 마을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전 연도 조사 결과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2012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2013년에는 약 47%, 2014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4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부정적 의견은 2013년도 약 17%에서 2014년 약 11%로 낮아졌으며, ‘보통(4~6점 부여)’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이 증가했다.
 -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2012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43%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2013년에는 약 34%, 2014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2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부정적 의견은 2013년도 약 31%에서 2014년 24%로 낮아졌으며, ‘보통(4~6점 부여)’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이 증가했다.

표 3-13. 만족도: 정주지 발전에 대한 인식(2012~2014년)

(단위: %)

구 분	조사 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잘 모름	전 체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28.3	28.3	43.4	-	100
	2013년	30.7	21.3	33.8	14.2	100
	2014년	24.0	40.2	27.7	8.1	100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15.9	20.1	64.0	-	100
	2013년	17.2	20.6	46.5	15.7	100
	2014년	10.5	36.2	42.0	11.3	100

주: 95% 신뢰수준에서 조사의 표본오차는 2012년 $\pm 5.2\%p$, 2013년 $\pm 3.8\%p$, 2014년 $\pm 3.59\%p$

- 마을 주민이 거주 시·군과 마을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이전 연도 조사 결과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각 연도 조사의 표본오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3-4. 만족도: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2012~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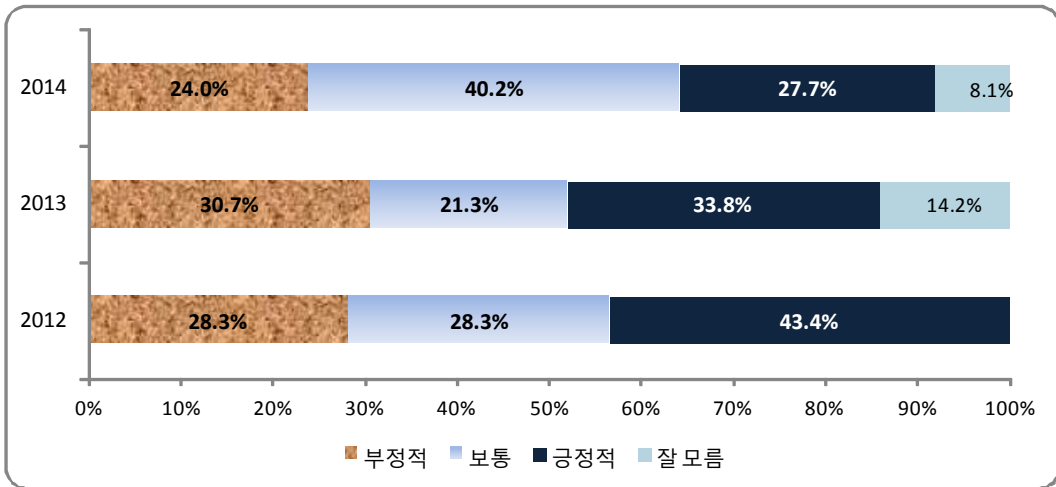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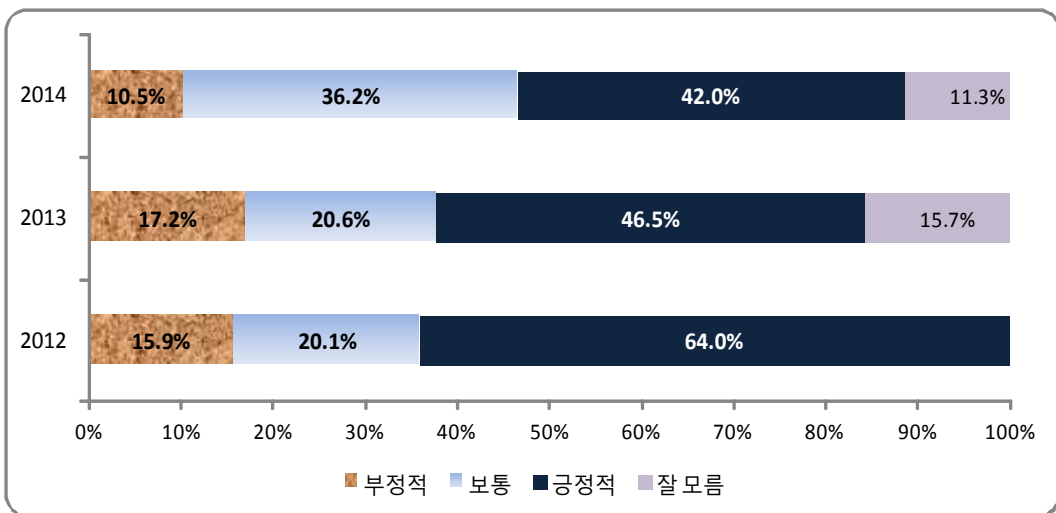


그림 3-5. 만족도: 시·군의 발전 가능성 인식(2012~2014년)



- 행복감, 정주만족,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자 점수의 평균은 <표 3-14>와 같다.¹⁵ 100점을 만점(11개 구간)으로 환산하면, 2014년에는 대체로 50~60점 사이의 점수를 받았다. 향후 마을 발전에 대한 인식은 46점으로 특히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14.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2년	3.25	-	3.23	3.71	5점 척도
	(65.0)	-	(64.6)	(74.2)	
2013년	3.38	3.36	3.11	3.53	5점 척도
	(67.6)	(67.2)	(62.2)	(70.6)	
2014년	6.08	6.34	5.06	6.26	11점 척도
	(55.3)	(57.6)	(46.0)	(56.9)	

주1: 95% 신뢰수준에서 조사의 표본오차는 2012년 $\pm 5.2\%$ p, 2013년 $\pm 3.8\%$ p, 2014년 $\pm 3.59\%$ p

주2: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주3: 괄호 안은 100점 만점 환산 점수(2014년의 경우 (평균점수×100)÷11로 계산).

15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1~5점 부여)를 사용한 반면,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를 사용했고, 과거 연도와 달리 평균 값 산정 시 0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도 간 점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4.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만족도

4.3.1. 부문별 중요도 인식

○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래 8대 부문¹⁶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1순위로 중요도를 응답한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 부문이 28.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경제가 15.2%의 응답을 얻었다.

- 주거 및 생활환경(13.0%), 지역사회(11.2%), 안전(11.0%) 부문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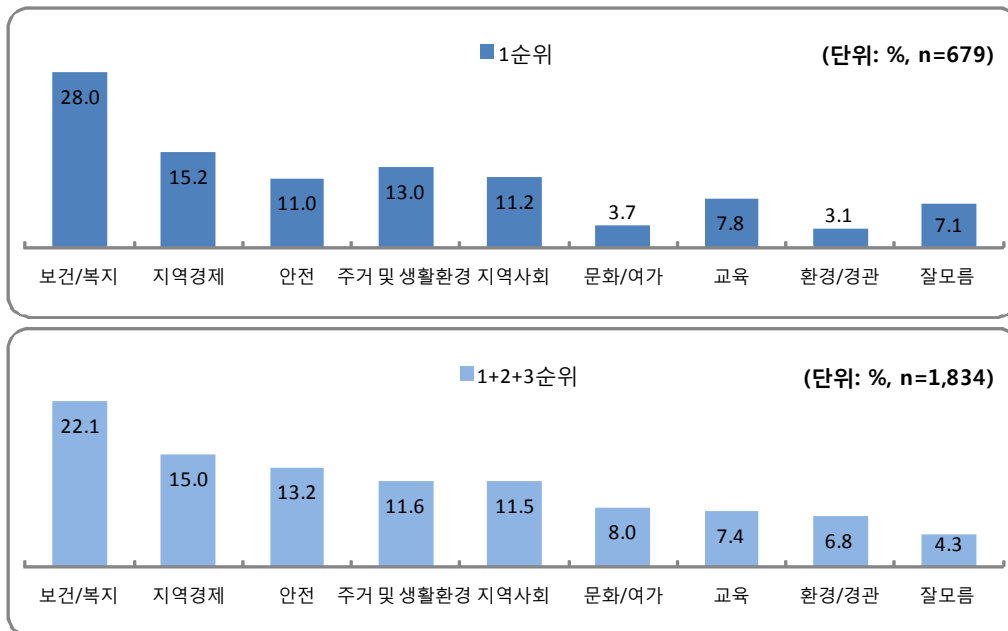
표 3-15.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환산점수 (점)	1순위		다중응답(1~3순위)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보건·복지	2.12	190	28.0	406	22.1
교육	0.67	53	7.8	136	7.4
주거 및 생활환경	1.00	88	13.0	213	11.6
지역경제	1.29	103	15.2	276	15.0
문화·여가	0.53	25	3.7	146	8.0
환경·경관	0.46	21	3.1	124	6.8
지역사회	0.96	76	11.2	211	11.5
안전	1.01	75	11.0	243	13.2
잘 모름	-	48	7.1	79	4.3
전 체	-	679	100	1,834	100

주: '1순위'는 1순위 선택만 집계, '다중응답'은 1순위~3순위까지의 선택을 모두 집계한 결과임.

16 조사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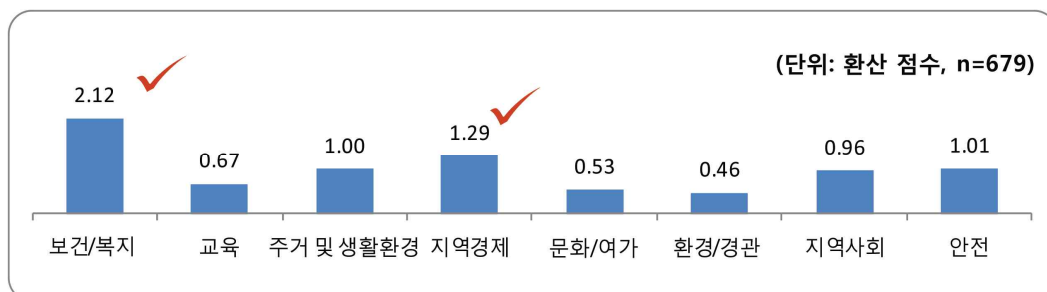
그림 3-6.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순위 부여)



- 1순위는 5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1점,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산정한 환산점으로 보면, ‘보건·복지’ 부문이 2.12점으로 타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 부문이 1.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 밖으로는 안전(1.01), 주거 및 생활환경(1.00), 지역사회(0.96)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림 3-7.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환산점수)



4.3.2.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8대 부문별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평균 점수)를 살펴보았다.¹⁷ 전체 부문 평균은 5.26점으로 나타나, 최고 점수인 10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그리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세부사항의 평균 점수인 5.26점을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더 또는 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부사항을 <표 3-16>에 제시했다.
-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지 않은 가운데, 안전(6.48)과 지역사회(6.02) 부문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환경·경관(5.78), 보건·복지(5.60), 주거 및 생활환경(5.29) 등 부문이 5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다.
- 교육(4.98), 지역경제(4.33), 문화·여가(3.16) 부문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문화·여가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17 2014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2013년 조사의 세부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했고, 같은 세부 항목이라도 설문조사의 질문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2013년과 2014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는 <부록 5> 참고.

표 3-16.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부문	평균 점수			상대적 여건('14)	세부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보건 복지	2.8	3.61	5.69	5.62 ▲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5.16 ▼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5.74 ▲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5.88 ▲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2.5	3.39	4.94	5.27 ▲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4.68 ▼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주거 및 생활 환경	3.3	3.02	5.29	5.78 ▲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	도시가스 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4.82 ▼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57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지역 경제	2.1	2.92	4.28	4.15 ▼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4.55 ▼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4.29 ▼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2.2	2.52	3.15	3.55 ▼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환경 경관	3.4	3.82	5.79	5.72 ▲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5.83 ▲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지역 사회	2.8	3.46	6.04	6.06 ▲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5.98 ▲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안전	-	-	6.53	6.73 -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전 체	2.7	3.25	5.26		

주1: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를 사용함에 유의.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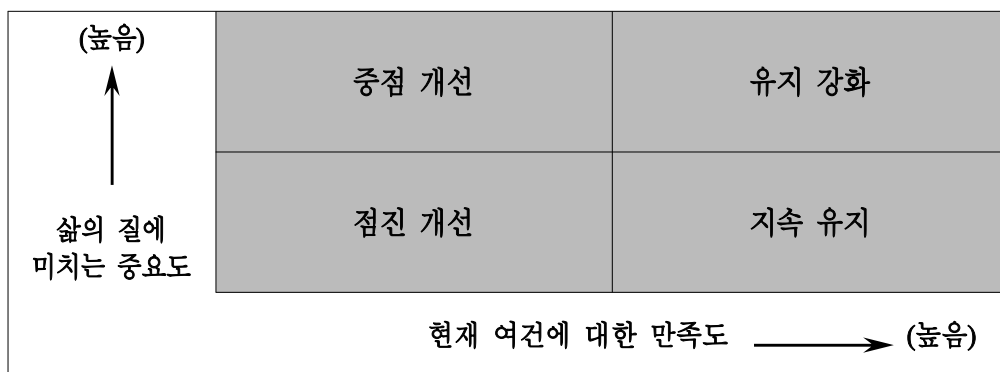
주3: 상대적 여건은 22개 세부사항의 평균점수(5.26점)와 비교 시 상대적 높고(▲)·낮음(▼)을 의미함.

4.3.3. 부문별 중요도 대비 만족도 매트릭스로 살펴본 정책 우선순위: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 간 비교

○ 삶의 질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중요도’와 현재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두 축으로 한 매트릭스(그림 3-8)를 통해 8가지 삶의 질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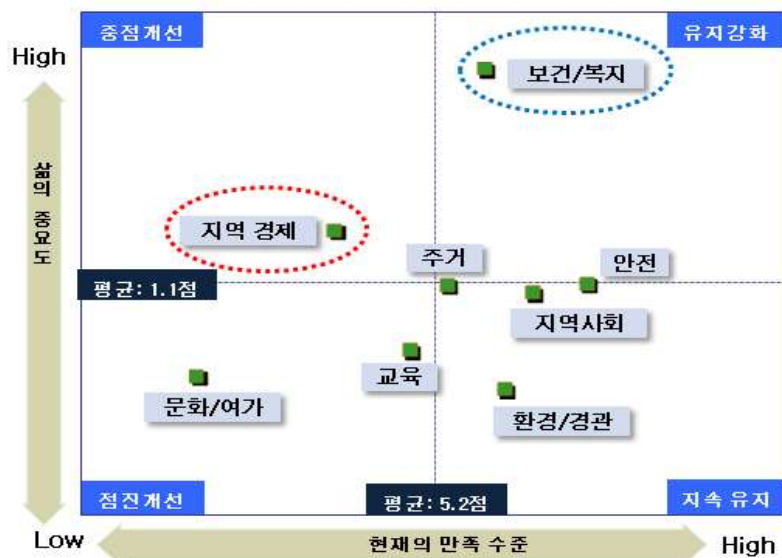
- ‘**유지 강화**’는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도도 높고 현재 만족도도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할 부문이다.
- ‘**중점 개선**’은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 ‘**지속 유지**’는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재 만족도가 양호하여, 현재 여건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다.
- ‘**점진 개선**’은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만족도도 낮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그림 3-8. 중요도 대비 만족도 매트릭스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면(그림 3-9), 보건·복지 부문은 중요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 향후 유지·강화해야 할 부문이다.
- 반면, 지역경제 부문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 환경·경관, 안전 등 부문은 상대적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 수준은 양호한 편이라, 현재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 한편, 문화·여가, 교육 부문은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평가이므로, 이 두 부문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9. 부문별 중요도 대비 만족도: 전체 마을



- 정주체계상의 마을 유형으로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그림 3-10).
-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과 관련해서는, 두 유형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른 양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 두 가지 마을 유형에서 공히 보건·복지 부문은 삶의 질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부문이면서, 그와 관련한 만족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 지역경제는 정주체계상의 마을 유형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낮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높은 부문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정책 부문이라 볼 수 있다.
 - 문화·여가와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보인다. 환경·경관 부문의 경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 당장의 적극적 정책 대응 면에서는 후순위지만, 문화·여가 부문은 만족도가 가장 낮다.
- 주거, 교육, 지역사회 부문과 관련해서는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 중심지마을 주민들은 배후마을에 비해 주거 부문을 삶의 질에 있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만족도도 평균 이상인 반면, 배후마을 주민들은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더 낮게 보고 있으며 만족도도 평균 정도에 머물러 있다.
 - 교육 부문은 배후마을에 비해 중심지마을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만족 수준도 조금 더 높다. 중심지마을은 전 부문의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배후마을은 만족 수준이 평균 아래이다.
 - 두 유형 모두 지역사회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배후마을에서 중심지마을에 비해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3-10. 부문별 중요도 대비 만족도: 중심지마을 및 배후마을



그림 3-11. 마을 유형(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8대 부문별 중요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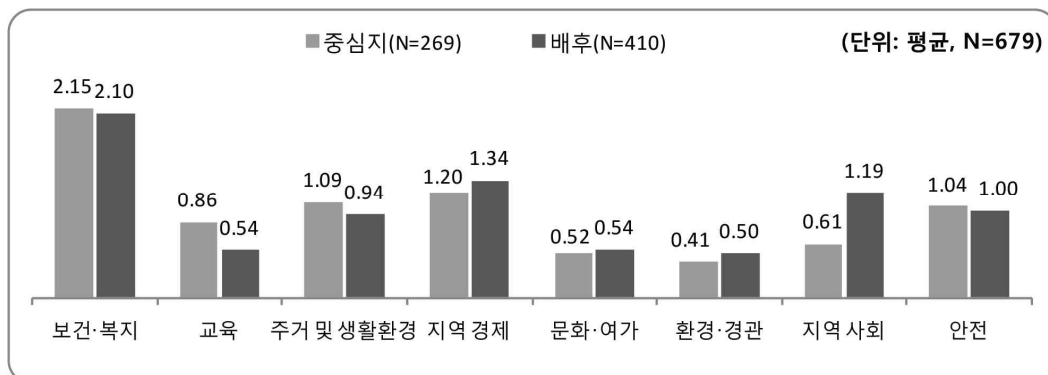


표 3-17. 마을 유형(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부문별 삶의 질 만족도 차이

(단위: 점)

부문	중심지 마을	배후 마을	차이	세부 항목
보건 복지	5.83	5.49	0.34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5.61	4.91	0.70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5.94	5.61	0.34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6.14	5.71	0.43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5.85	4.91	0.94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4.94	4.51	0.43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주거 및 생활 환경	5.93	5.69	0.24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5.13	4.86	0.27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5.20	4.58	0.62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6.07	5.24	0.83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지역 경제	4.15	4.15	0.00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4.49	4.59	-0.10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4.29	4.29	0.00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4.16	3.16	1.00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9	2.56	0.53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환경 경관	5.66	5.76	-0.11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5.89	5.78	0.11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지역 사회	6.01	6.09	-0.08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5.58	6.23	-0.65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안전	6.72	6.73	-0.01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55	6.25	0.30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66	6.12	0.54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주1: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주2: 차이는 '중심마을의 평균점수 - 배후마을의 평균 점수'임.

4.4. 주관적 삶의 질 지수

4.4.1. 2014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및 부문 지수

- 8대 부문¹⁸의 22개 세부사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질문하여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그리고 전 부문의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구했다.
 - 8대 부문에 대한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는 삶의 질과 관련된 각 부문의 세부사항들에 대한 점수를 평균했다.¹⁹ 부문별로 2~4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된다.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삶의 질과 관련한 각 부문의 주관적 만족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값으로,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들을 가중평균하여 구했다.²⁰
- 2014년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5.2점으로(10점 만점),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2.3점에 해당한다.²¹
-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2014년에는 부문별로 대체적으로 5~6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문화·여가, 지역경제 등의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타 부

18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부터 도입될 ‘안전’ 부문을 포함시켜,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등 8대 부문에 대해 조사했다.

19 부문별 평균 산출 시 ‘잘 모름/무응답’인 경우는 제외했다.

20 가중평균 산출 시 사용한 부문별 가중치는 ‘20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21 2014년 조사부터는 만족도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점수를 0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평균 점수 산출 시 0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이전 연도의 조사(1부터 시작) 결과들과 비교할 시 불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리함을 보정하기 위해 0점을 받은 경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시 1점을 부여하여 계산했다.

문에 비해 상당히 더 낮게 나타났다(그림 3-12).

- 전체 세부분야의 평균(5.26)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역사회, 환경·경관, 보건·복지,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문화·여가, 지역경제, 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더 낮았다.

* 보건·복지(5.7점), 교육(4.9점), 주거 및 생활환경(5.3점), 지역경제(4.3점), 문화·여가(3.1점), 환경·경관(5.8점), 지역사회(6.0점), 안전(6.5점)

그림 3-12. 2014년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단위: 점)



주: 10점 만점에 대한 값.

4.4.2. 2012~2014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다음의 <표 3-20>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 연도별로 주관적 삶의 질 지수와 각 부문 지수를 제시했다.²²
-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응답자가 만족 정도에 따라 1~5점 부여)를 사용한 반면, 2014년 조사에서는 11점 척도(응답자가 만족 정도에 따라 0~10점 부여)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 더욱이 과거 연도 조사와 달리, 2014년 조사에서는 평균 값 산정 시 0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역시도 연도 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²³

표 3-18. 연도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2012~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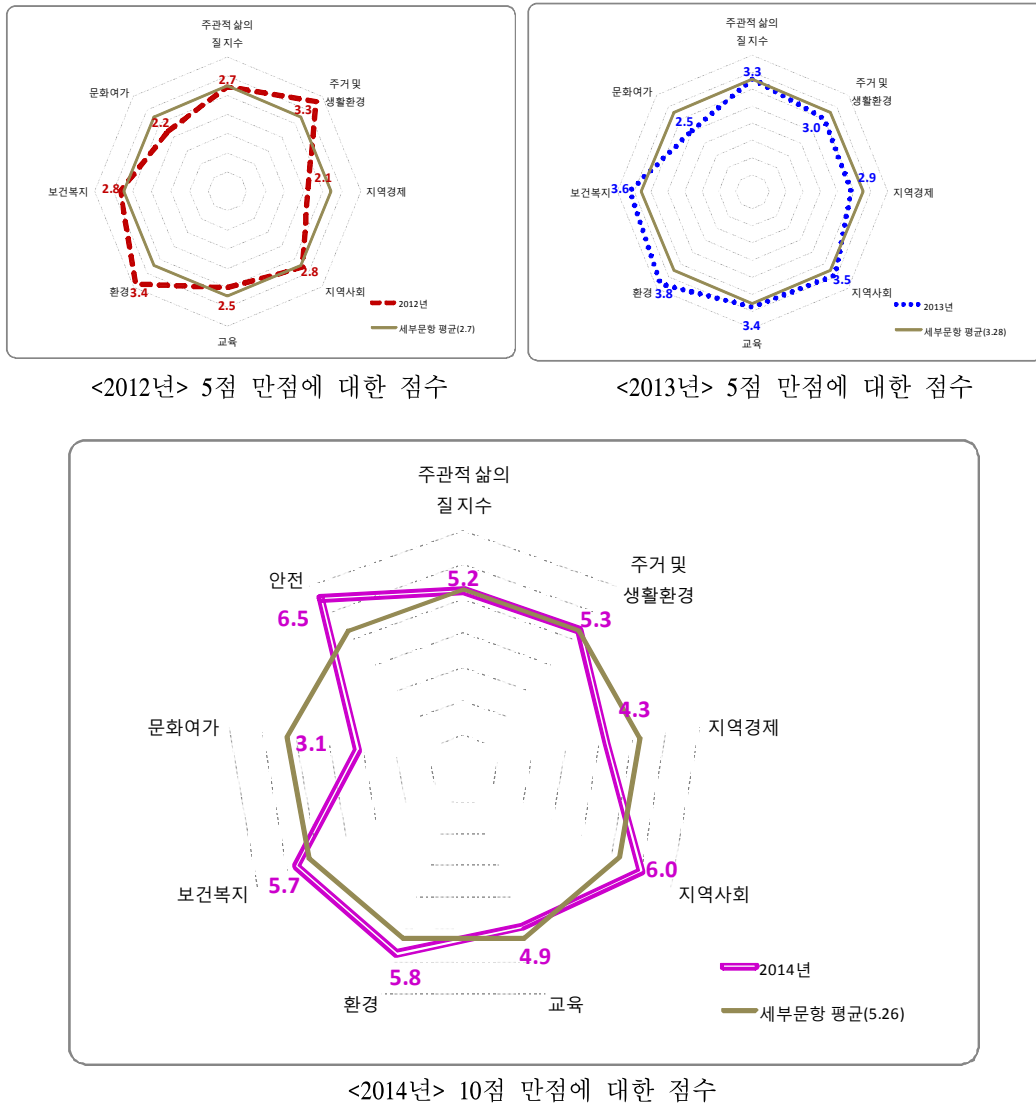
(단위: 점)

구 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문 지수							
		보건 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 경제	문화 여가	환경	지역 사회	안전
2012년 (5점 만점)	2.7점	2.8점	2.5점	3.3점	2.1점	2.2점	3.4점	2.8점	-
2013년 (5점 만점)	3.3점	3.6점	3.4점	3.0점	2.9점	2.5점	3.8점	3.5점	-
2014년 (10점 만점)	5.2점	5.7점	4.9점	5.3점	4.3점	3.1점	5.8점	6.0점	6.5점

주: 95% 신뢰수준에서 2012년 조사의 표준오차는 $\pm 5.2\%p$, 2013년 조사의 표준오차는 $\pm 3.8\%p$, 2014년 조사의 표준오차는 $\pm 3.59\%p$ 임.

- 22 2012년~2014년 각 연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문항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도 간 점수를 엄밀히 비교할 수는 없고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조사에서는 ‘안전’ 부문이 새로 포함되었다.
- 23 2014년 조사부터는 만족도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점수를 0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평균 점수 산출 시 0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이전 연도의 조사(1부터 시작) 결과들에 비해 불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리함을 보정하기 위해 0점을 받은 경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시 1점을 부여하여 계산했다.

그림 3-13.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변화(2012~2014년)



주: 안전 부문은 2014년부터 조사에 포함됨.

4.4.3. 시·군 및 마을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2014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순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2014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순위에 따라 상·중·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값의 평균을 비교했다.
 - 지수 상위 지역은 진주시(문산읍 삼곡리) 1개만 해당되고, 57위~102위 범위에 해당되는 14개 지역이 지수 중위 지역, 나머지 152~159위 범위에 해당되는 나머지 5개 지역이 지수 하위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 부문별 지수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 지수와 주거 및 생활환경 지수에서는 지수 상위 시·군이 중위나 하위 시·군에 비해 지수값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 이 두 부문에서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관 부문에서는 지수 중위 시·군보다 하위 시·군에서 관련 만족도가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문에서는 유형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위·중위·하위 지역 간에도 어떠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수 상위 시·군과 중위 시·군 간에는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지수 하위 시·군과의 비교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 이러한 결과는 지수 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 그리고 지수 중위 지역 중에서도 순위가 비교적 낮은 지역과 하위 지역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표 3-19.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중·하 지역 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부 문	유형 구분	지수 평균	사후검정 결과	
			지수 중위 시·군	지수 하위 시·군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지수 상위 시·군	5.69	* (p=0.073)	
	지수 중위 시·군	5.14		
	지수 하위 시·군	5.31		
보건·복지	지수 상위 시·군	6.63	** (p=0.010)	** (p=0.033)
	지수 중위 시·군	5.60		
	지수 하위 시·군	5.69		
교육	지수 상위 시·군	5.72		
	지수 중위 시·군	4.83		
	지수 하위 시·군	5.04		
주거 및 생활환경	지수 상위 시·군	6.34	*** (p=0.001)	** (p=0.013)
	지수 중위 시·군	5.17		
	지수 하위 시·군	5.37		
지역경제	지수 상위 시·군	4.89		
	지수 중위 시·군	4.26		
	지수 하위 시·군	4.19		
문화·여가	지수 상위 시·군	3.76		
	지수 중위 시·군	3.01		
	지수 하위 시·군	3.37		
환경·경관	지수 상위 시·군	5.86		
	지수 중위 시·군	5.65		** (p=0.034)
	지수 하위 시·군	6.13		
지역사회	지수 상위 시·군	5.89		
	지수 중위 시·군	5.93		
	지수 하위 시·군	6.34		
안전	지수 상위 시·군	6.55		
	지수 중위 시·군	6.47		
	지수 하위 시·군	6.66		

*: p<0.1, **: p<0.05, ***: p<0.01

주1: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함. 비교 집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함.

주2: 짙은 음영 표시가 비교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

□ 마을의 정주체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 주민들 간에는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여가 부문에서 두 유형 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경제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부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0. 마을의 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구 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보건 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 환경	지역 경제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지역 사회	안전
2013년 조사	중심지마을	3.42	3.82	3.57	3.18	3.01	2.85	3.83	3.48	-
	배후마을	3.21	3.48	3.28	2.91	2.87	2.31	3.81	3.44	-
	유의확률(양측)	***	***	**	***		***			
2014년 조사	배후마을	5.39	5.99	5.31	5.57	4.36	3.62	5.88	5.86	6.66
	중심지마을	5.12	5.51	4.73	5.14	4.23	2.87	5.74	6.14	6.45
	유의확률(양측)	**	***	***	***		***			

*: p<0.1, **: p<0.05, ***: p<0.01

주: 음영 표시가 비교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

□ 마을의 인구(가구) 규모 및 정주체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마을의 인구(가구) 규모를 함께 고려한 정주체계상 중심성에 따라 조사대상 마을을 <표 3-2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정주체계상의 중심성은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의 두 범주로 구분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진주시 삼곡리, 청송군 진안1리는 중심지마을로 조정했다.²⁴

표 3-21. 마을 인구 규모 및 정주체계상 중심성에 따른 마을 유형 구분

구분		정주체계상 중심성	
		중심지마을	배후마을
마을 규모	소규모 마을 (100호 미만)	-	① 소규모 배후마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청송군 파천면 신흥1리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남해군 남면 흥현1리
	중규모 마을 (100호~300호)	③ 중규모 중심지마을 제천시 백운면 평동1리 양평군 청운면 용두1리 신안군 도초면 수향리	② 중규모 배후마을 연천군 청산면 초성2리 화천군 화천읍 풍산2리 화순군 동면 오동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대규모 마을 (300호 이상)	④ 대규모 중심지마을 홍성군 홍성읍 오관1리 청송군 진보면 진안1리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

24 문산읍사무소는 삼곡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지역조사에서 배후마을로 잘못 응답되었던 것을 수정했다. 진보면사무소는 진안2리에 소재하지만, 진안1리가 진안2리와 바로 맞붙어있고 진보면사무소와 진안1리회관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사실상 중심지마을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했다(송미령 외, 2013).

- 분석 결과,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소규모 배후마을과 대규모 중심지마을 간, 그리고 중규모 중심지마을과 대규모 중심지마을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대규모 중심지마을(5.70)이 소규모 배후마을(5.07)보다 0.63 더 높았고, 중규모 중심지마을(5.04)에 비해서는 0.66 더 높았다.
-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별로 살펴보면, 특히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규모 중심지마을이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서 지수 값 평균이 높았다. 즉, 이 두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중심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어떤 마을유형의 주민들보다도 뚜렷이 더 높은 만족 정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차이를 확인했다. 대규모 중심지마을(6.30)이 소규모 배후마을(5.42)과 중규모 중심지마을(5.63)에 비해 지수 값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중규모 배후마을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교육 부문에서는 대규모 중심지마을(5.65)과 소규모 배후마을(4.61)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소규모 배후마을(6.28)이 중규모 중심지마을(5.62)에 비해 더 높은 만족 정도를 나타냈다. 그 외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3-22. 마을의 인구 규모 및 정주체계상 성격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 문	유형 구분	지수 평균	사후검정 결과		
			중규모 배후마을	중규모 중심지마을	대규모 중심지마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소규모 배후마을	5.07			*** (p=0.001)
	중규모 배후마을	5.25			
	중규모 중심지마을	5.04			*** (p=0.006)
	대규모 중심지마을	5.70			
보건·복지	소규모 배후마을	5.42			*** (p=0.001)
	중규모 배후마을	5.77			
	중규모 중심지마을	5.63			* (p=0.090)
	대규모 중심지마을	6.30			
교육	소규모 배후마을	4.61			*** (p=0.001)
	중규모 배후마을	5.04			
	중규모 중심지마을	4.92			
	대규모 중심지마을	5.65			
주거 및 생활환경	소규모 배후마을	5.05			*** (p=0.000)
	중규모 배후마을	5.36			** (p=0.039)
	중규모 중심지마을	5.02			*** (p=0.000)
	대규모 중심지마을	6.06			
지역경제	소규모 배후마을	4.22			
	중규모 배후마을	4.27			
	중규모 중심지마을	3.93			** (p=0.032)
	대규모 중심지마을	4.76			
문화·여가	소규모 배후마을	2.82			*** (p=0.000)
	중규모 배후마을	3.02			*** (p=0.000)
	중규모 중심지마을	2.60			*** (p=0.000)
	대규모 중심지마을	4.54			
환경·경관	소규모 배후마을	5.81			
	중규모 배후마을	5.56			
	중규모 중심지마을	5.63			
	대규모 중심지마을	6.10			
지역사회	소규모 배후마을	6.28		** (p=0.049)	
	중규모 배후마을	5.78			
	중규모 중심지마을	5.62			
	대규모 중심지마을	6.07			
안전	소규모 배후마을	6.41			
	중규모 배후마을	6.56			
	중규모 중심지마을	6.82			
	대규모 중심지마을	6.53			

* : p<0.1, ** : p<0.05,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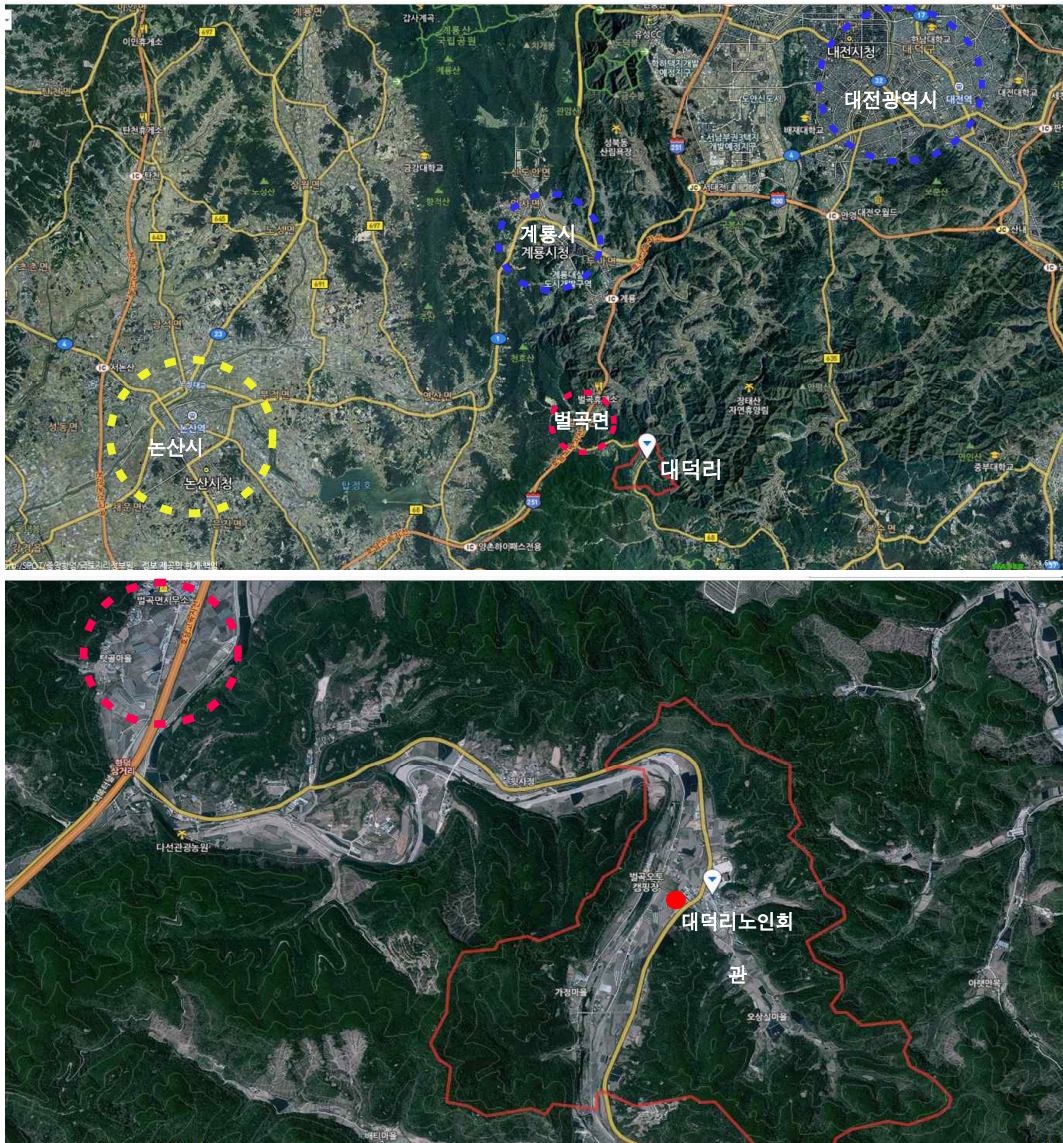
주1: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함. 비교 집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함.

주2: 짙은 음영 표시가 비교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소규모 배후마을)>

- 대덕리는 가정마을, 오상실마을, 마르뜰마을 등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며, 마을 주민 대부분(은퇴자 등 이주민은 미 해당)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마을이다. 2013년 기준, 121가구 290명이 거주하고 있다.
- 전 가구가 마을상수도, 개별 하수정화조를 사용한다. 농협하나로마트가 자동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약 20 가구가 유입되어, 현재는 마을에 빈집이 없고 새로 지은 집들도 제법 있다. 예전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었으나,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먹고살 거리가 생기자 최근에는 일부 자식들도 마을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마을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외지 출신들(은퇴자 등)도 일부 들어왔다.
- 2007년도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되어 대덕리와 만목, 덕곡, 도산리 등 4개 마을이 대둔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5년간 약 60억 원)을 추진했다. 이 권역사업으로 지은 벌곡오토캠핑장은 운영이 꽤 잘 되는 편이다. 캠핑 사이트 임대료(월 약 680만 원)와 장작 등 판매수입을 합쳐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인근에 장태산자연휴양림, 대둔산도립공원, 수락계곡 등의 관광자원이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점이다. 권역사업 중 잘 안 되는 사업도 있다. 족욕체험장, 농촌박물관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바꿔보려고 고민 중에 있다.
- 마을에 큰 갈등은 없지만, 처음에는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던 주민들이, 사업비가 들어오고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림 3-14.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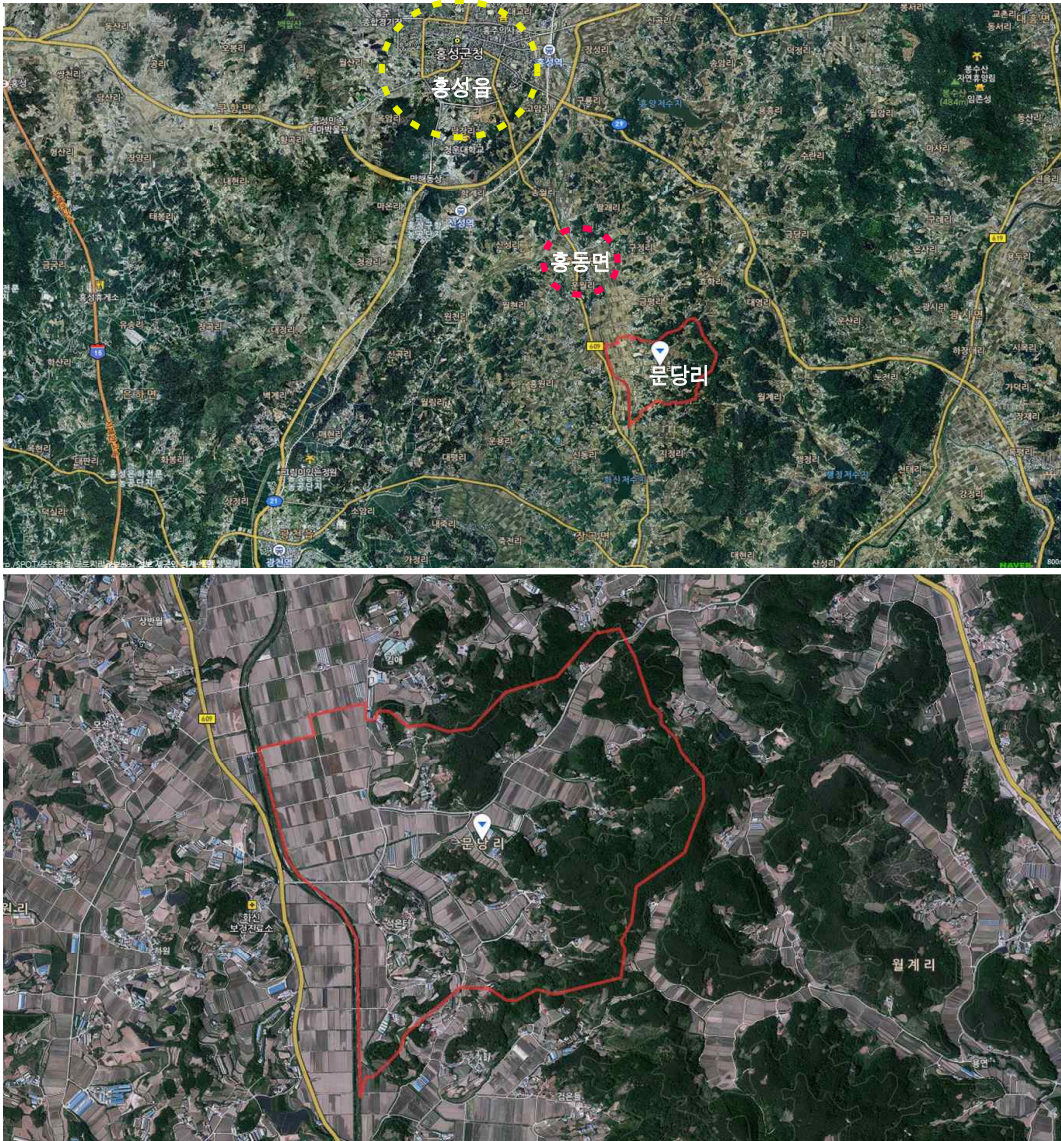


- 주1: 출처는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소요시간은 네이버지도 길찾기 기준
- 주2: (위) 붉은색 실선이 대덕리
(아래) 붉은색 점이 대덕리노인회관, 붉은색 점선이 벌곡면사무소 소재지
- 주3: 대덕리노인회관~벌곡면사무소까지 자동차로 약 5km 거리, 9분 소요
대덕리노인회관~논산시청까지 자동차로 약 25km 거리, 45분 소요
대덕리노인회관~계룡시청까지 자동차로 약 16km 거리, 32분 소요
대덕리노인회관~대전광역시청까지 자동차로 약 34km 거리, 50분 소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소규모 배후마을)>

- 문당리는 99가구, 235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농업 성격이 매우 강한 마을로, 유기농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다. 1993년 친환경오리농법을 도입,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2003), 농촌종합개발마을(200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2010), Rural-20프로젝트 선정(2012), 농어촌인성학교지정(2013)을 받을 정도로 여러 마을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 문당리는 교육관이 건립된 해인 2000년에 마을 100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의 변하지 않을 기본 목표를 설정했다. “넉넉한 문당리, 오순도순 문당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문당리,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질 수 있는 문당리” 라는 모토 아래 마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문당리 주민들은 “희망이 있는 마을”, “자녀가 돌아오는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30~40대의 마을 청년 20여 명이 모여 공동작업 등을 통해 종자돈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논의도 있고, 마을 어른들도 청년들의 사업 내용을 많이 도와주려는 분위기이다.
- 특히 문당리에서는 ‘환경농업교육관’을 중심으로 사업이나 마을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환경농업교육과 초기 설립부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속감과 동질 의식이 매우 높다. 마을 내 다양한 행사(노인잔치, 생일, 결혼) 등을 교육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행사 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찜질방 운영, 영화 상영, 교육관 내에서 운동 교육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마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일부만을 배당금 형식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10~20만 원)하고, 나머지는 마을 발전 사업을 위해 다시 사용한다.
- 한편, 마을 내외에서 문당리의 자력으로만 마을이 발전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하에 현재는 마을활력소(홍동면 운월리 소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림 3-15.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입지



- 주1: 출처는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소요시간은 네이버지도 길찾기 기준임.
- 주2: (위) 노란색 점선이 홍성읍(군청 소재), 붉은색 점선이 홍동면사무소 소재지, 붉은색 실선이 문당리
(아래) 붉은색 실선이 문당리
- 주3: 문당리노인회관~홍동면사무소까지 자동차로 약 4km 거리, 8분 소요
문당리노인회관~홍성군청까지 자동차로 약 9km 거리, 23분 소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1리(대규모 중심지마을)>

- 홍성읍에 위치한 오관1리는 군청을 400m 인근에 두고 있는 중심지마을이다. 오관리에는 중대형마트, 편의점 등 각종 상점, 병의원, 영화관, 학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충남도청이 이전(홍성 흥북면, 예산 삼교읍 일원)함에 따라 예상되는 홍성읍 도심권의 공동화 문제가 최근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오관리는 노후주택이 많고 인구·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그와 관련하여 홍성군은 홍주성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2015년 3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일반지구 공모사업)의 준비 일환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교육과정(도시재생 이해, 성공사례, 선진지 견학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홍성군의 중심에 위치한 오관리는 미림청솔아파트(오관5리),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오관6리), 경성아파트(오관9리) 등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밀집으로 행정 전달력이 감소되어 2013년 행정리 분리나 별도의 반 증설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림 3-16.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입지



- 주1: 출처는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소요시간은 네이버지도 길찾기 기준
- 주2: (위) 붉은색 실선이 오관리 경계, 붉은색 점이 오관리1구노인정마을회관
(아래) 노란색 점선이 홍성군청
- 주3: 오관1리노인정마을회관~홍성군청까지 자동차로 약 400m 거리, 2분 소요

□ 마을의 시·군청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마을에서 시·군청소재지로의 접근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살펴본
왔다.
 - 접근성은 ‘마을에서 시·군청소재지까지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으로,²⁵ 시·군청까지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을(‘15분 이내 마을’), 15분은 넘지만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마을(‘15~30분 마을’), 30분이 넘게 걸리는 마을(‘30분 초과 마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시·군청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마을유형 사이에는 주관적 삶의 질 지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에서는 15분 이내로 인접한 마을(5.36)과 30분을 초과하는 비교적 먼 마을(5.00) 간에 차이가 있었다.
- 종합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부문에서도 15분 이내 마을(4.49)의 주민이 30분 초과 마을(3.96)의 주민에 비해 경제활동과 관련된 만족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소재지 접근성이 높은 마을일수록 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보듯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높지 않지만, 15분 이내로 소재지에 인접한 마을(3.54)이 15~30분이 소요되는 마을(3.50),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더 먼 마을(2.29)에 비해서는 만족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²⁵ 자동차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접근성(대중교통 운행 여부, 운행 빈도 등)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표 3-23. 시·군청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 문	유형 구분	지수 평균	사후검정 결과	
			15~30분	30분 초과
주관적 삶의 질 지수	15분 이내	5.36		* (p=0.050)
	15~30분	5.28		
	30분 초과	5.00		
보건·복지	15분 이내	5.88		
	15~30분	5.65		
	30분 초과	5.54		
교육	15분 이내	5.00		
	15~30분	5.10		
	30분 초과	4.65		
주거 및 생활환경	15분 이내	5.44		
	15~30분	5.32		
	30분 초과	5.11		
지역경제	15분 이내	4.49		* (p=0.051)
	15~30분	4.35		
	30분 초과	3.96		
문화·여가	15분 이내	3.54		*** (p=0.000)
	15~30분	3.50		*** (p=0.000)
	30분 초과	2.29		
환경·경관	15분 이내	5.93		
	15~30분	5.81		
	30분 초과	5.63		
지역사회	15분 이내	6.18		
	15~30분	5.87		
	30분 초과	6.13		
안전	15분 이내	6.37		
	15~30분	6.74		
	30분 초과	6.40		

*: p<0.1, **: p<0.05, ***: p<0.01

주1: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함. 비교 집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함.

주2: 짙은 음영 표시가 비교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

4.5. 이주 의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4.5.1. 이주 의향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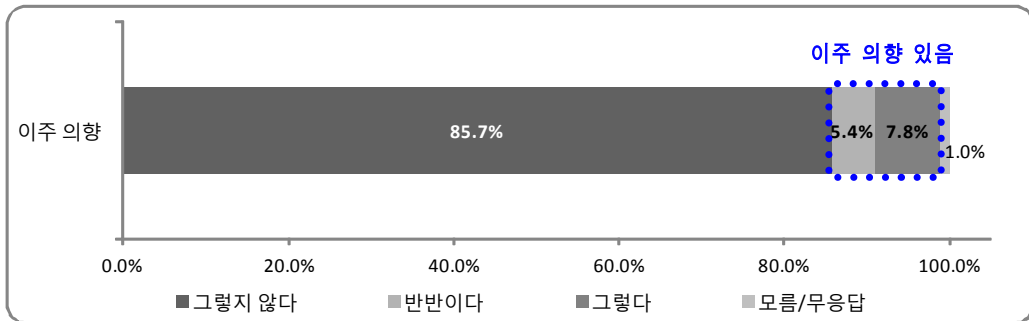
-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5.7%는 이주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3.2%로(‘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7.8%, ‘반반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5.4%), 전반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의사는 크지 않았다.
 - 201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2%가 이주 의향이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및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혀 이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74%였다.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약 12%였는데, 약 8%는 ‘이주 의향이 약간 있다’는 응답이었고, 4%가 비교적 강한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에서 도시로 이주하겠다고 답한 경우는 37.8%였다. 현재 면에서 살고 있는데 읍으로 가겠다는 경우가 12.2%, 살고 있는 읍 또는 면 내의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경우가 14.4%, 현재 시·군을 떠나지는 않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경우가 13.3%였다. 현재 시·군을 떠나 다른 농촌지역으로 가겠다는 경우는 13.3%였다.
 - 2013년 조사에서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절반 정도(48.6%)가 도시로 옮겨가기를 원했고, 4분의 1 정도는 다른 농어촌 시·군(27.1%)을 선호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경우는 이주 의향 응답자의 19% 정도였다. 현재 거주 지역(시·군 및 읍·면) 내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여 약 46%는 이주를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으로 가겠다는 의견이었고, 48.6%가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를 희망하지만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지역을 답하지 않은 경우는 6%였다.

표 3-24.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및 이주하려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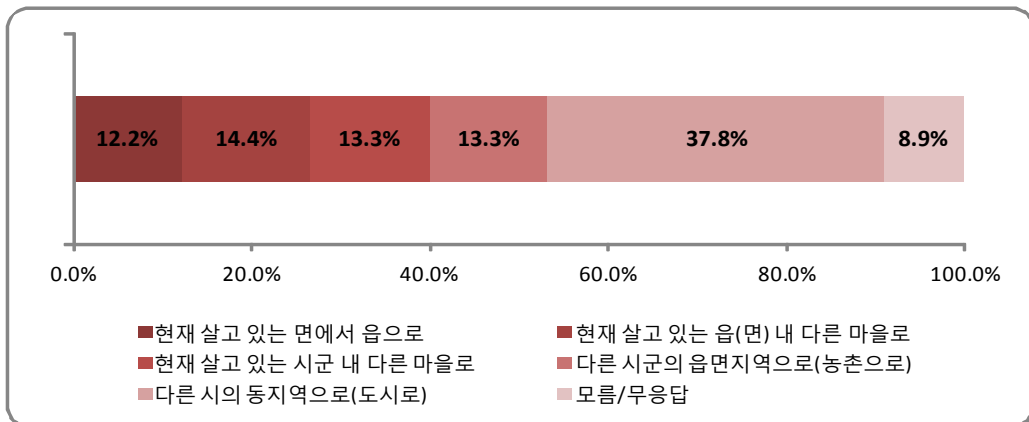
(단위: %)

이주 의향	응답 비율		이주하려는 지역	응답 비율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그렇지 않다	81.5	85.7	현재 살고 있는 면에서 읍으로	-	12.2
반반이다	6.9	5.4	현재 살고 있는 읍(면) 내 다른 마을로	10.0	14.4
그렇다	11.6	7.8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마을로	8.6	13.3
모름/무응답	-	1.0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으로(농촌으로)	27.1	13.3
합 계	100.0	100	다른 시의 동지역으로(도시로)	48.6	37.8
			모름/무응답	5.7	8.9
			합 계	100.0	100

그림 3-17.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및 이주희망지역



↓ 이주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이주희망지역



-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이주 의향을 가진 응답자만 해당)로는 ‘교통 불편’(13.3%)이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 환경(11.1%), 그리고 의료서비스 환경(10.0%)에 대한 불만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 나은 소득 기회를 찾아(6.7%) 이주하겠다는거나, 기초적 생활서비스 이용의 불편(5.6%), 문화·여가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족(5.6%)을 이유로 든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았다.²⁶
- 2013년 조사에서 이주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유(20.0%)와 ‘살고 있는 곳의 생활환경 불편’(17.1%)이었다. ‘교통 불편’(1.4%)을 더하면 18.5%가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기초 생활여건과 관련된 것이다. 자녀교육 환경(10.0%)과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10.0%)은 전년도에도 역시 주요 이주 희망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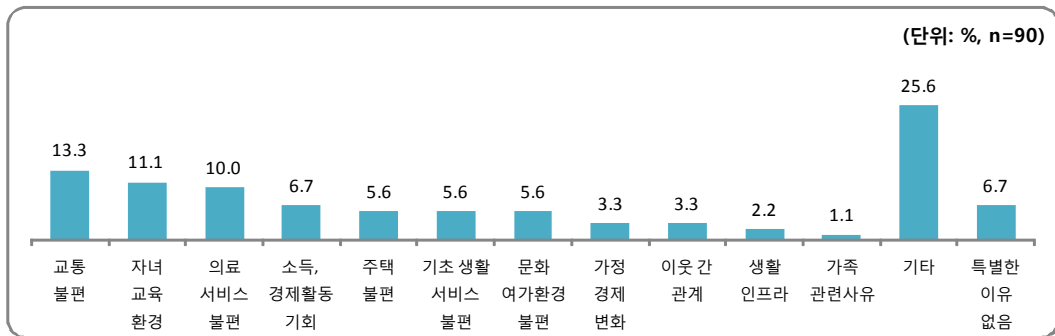
표 3-25. 이주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교통이 불편하다	1.4	13.3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10.0	11.1
의료서비스 환경이 좋지 않다	10.0	10.0
구직, 창업, 직장 이동 등 직업 / 더 나은 소득기회를 위해	20.0	6.7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17.1	5.6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0.0	5.6
문화, 여가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	5.7	5.6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0.0	3.3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	4.3	3.3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0.0	2.2
가족 관련 사유	2.9	1.1
기타	28.6	25.6
특별한 이유는 없다	0.0	6.7
전체	100	100

26 ‘기타’로는 ‘자연 재해(침수) 때문’, ‘외롭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발전이 안 되고 물가가 비싸다’, ‘도로 환경이 저저분하다’ 등의 이유가 있었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응답(‘모든 게 다 불편해서’, ‘시골이라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다’, ‘섬이라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등의 응답도 있었다.

그림 3-18. 이주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4.5.2.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표 3-26),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20.9%)가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응답했다. 두 번째로는 12.6%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상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등 ‘건강’과 관련한 요인을 꼽았다. 세 번째로는 7.1%의 응답자가 문화·여가 및 체육(운동), 휴식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다고 답한 경우(5.2%),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또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3.9%), 주거시설(21.7%)이나 생활서비스(2.1%)가 편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대답했다.
- ‘기타’ 응답으로는 봉사활동, 긍정적 사고/마음의 여유(안정), 사람들의 의식(교양 수준) 등 개인적 차원의 의견들이 있었고, 정책 영역과 연관되는 것으로는 자치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면사무소 직원이 마을 일을 수시로 관찰하고 잘 봐주었다는 응답, 농기구 대금이 저렴했으면 한다는 의견, 지역이 발전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3-26.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비율	비고
경제활동(소득·일자리)	156	20.9	
건강(보건·의료)	94	12.6	
문화·여가 및 체육(운동), 휴식 여건	53	7.1	
교통(대중교통) 편리성	39	5.2	
복지지원/확대	29	3.9	
주거시설 편리성	20	2.7	
생활서비스 편리성	16	2.2	
자녀교육 및 평생교육 여건	13	1.7	평생교육 2건 포함
가족 관련(가정 화목, 자식복 등)	12	1.6	
환경·경관	10	1.3	
가족, 친지 등과의 좋은 인간관계/교류	7	0.9	
좋은 지역사회(마을 화합)	6	0.8	
안전/재해 방지	3	0.4	
인구 유입(특히 젊은층 인구)/활성화	3	0.4	
기타	24	3.2	귀농·귀촌 지원(1건), 정보화(1건) 등 포함
없음	170	22.8	
모름/무응답	90	12.1	
합 계	745	100	

주: 복수 응답한 결과임.

5. 소결 및 시사점

■ 전반적 만족도나 거주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비해, 거주 마을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 농어촌 마을의 발전 비전이 보다 필요

-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 즉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49.6%였다. ‘보통’(4점~6점 부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9%였으며, 9.5%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 정주지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살고 있는 시·군이 향후에 발전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42.0%가 긍정적(동의하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36.2%가 보통으로 답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고 있는 마을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7.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40.2%는 ‘보통’ 의견을 보였지만, 24.0%는 부정적(마을이 발전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0~3점)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4분의 1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²⁷

■ 정책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지역경제’ 부문에 보다 삶의 질 향상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 8대 정책 부문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1순위만 집계한

²⁷ 조사의 표본오차나 응답 척도 변경 등으로 인해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43.4%가 긍정적(5점 만점에 4~5점 부여)이던 것이, 2013년 조사에서는 33.8%가 긍정(5점 만점에 4~5점 부여)했고, 2014년에는 27.7%로 낮아져 왔다.

결과와 1~3순위를 집계한 결과 모두 보건·복지(28.0%²⁸)와 지역경제(15.2%²⁹) 부문이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 중요도와 만족도(평균 점수)를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는 만족 수준이 비교적 높았지만, 지역경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서도, 지역경제 부문의 지수가 4.3으로 전 부문 평균(5.26)보다도 상당히 낮고, 타 부문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도 20.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만큼,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소득·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상당히 중요 하겠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 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강화도 중요

- 한편,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서는, 지역경제 부문 외에 문화·여가(3.1)와 교육(4.9) 부문이 전 부문의 평균값(5.2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두 부문은 정책부문별 중요도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당장의 시급한 필요는 아니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개방형으로 질문³⁰한 결과에서는 745개 응답(복수 응답) 중 세 번째로 높은 7.1%가 문화·여가 및 체육(운동),

28 1~3순위를 집계한 경우는 22.1%

29 1~3순위를 집계한 경우는 15.0%

30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귀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했다.

휴식 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는(‘반반이다’ 및 ‘그렇다’) 9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11.1%로 두 번째로 높았다.³¹ 이처럼 교육은 현 거주지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록 주민들이 인지하는 부문별 중요도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들 부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정주체계상 마을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 환경의 불균형, 시·군청소재지 접근성 불리로 인한 불편을 완화·개선하기 위한 유연한 방안 필요

- 문화·여가, 주거 및 생활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등의 부문에서, 인구(가구) 규모 및 정주체계상 성격, 시·군청 소재지 접근성 등과 관련한 마을유형에 따라 만족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대규모 중심지마을일수록, 시·군청 소재지에서 가까운(접근성이 높은) 마을일수록 만족 정도가 높았다.
- 이들 부문은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중요도에서 상위를 차지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들인 만큼, 정주체계상 마을유형에 따라 각종 서비스 이용 환경의 불균형이 생기는 부분을 완화하고, 시·군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불리한 접근성에 기인한 불편(불만족)을 완화·개선하기 위한 유연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³¹ 이주하려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는 교통 불편(13.3%), 세 번째는 의료서비스 환경(10.0%)이었다.

제 4 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비교

1. 조사의 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현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지역 주민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5년 및 2007년에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위 자료를 활용하여 도-농 간 만족도 격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 기존 연구의 지표 중 삶의 질과 관련한 농촌 핵심 지표를 도출하여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대상

- 조사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도시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만을 도시로 간주하고, 광역시 내 5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은 농촌 지역에 포함하였다.

표 4-1.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2013년 말 기준)

일련 번호	시·도	일련 번호	시·도	시·군	일련 번호	시·도	시·군	
1	서울특별시	8	경기도	수원시	27	충청북도	청주시	
2	부산광역시	9		성남시	28		충주시	
3	대구광역시	10		의정부시	29	충청남도	천안시	
4	인천광역시	11		안양시	30		아산시	
5	광주광역시	12		부천시	31	전라북도	전주시	
6	대전광역시	13		광명시	32		군산시	
7	울산광역시	14		평택시	33		익산시	
		15		안산시	34	전라남도	목포시	
		16		고양시	35		여수시	
		17		남양주시	36		순천시	
		18		오산시	37	경상북도	포항시	
		19		시흥시	38		경주시	
		20		군포시	39		구미시	
		21		용인시	40		경산시	
		22		파주시	41	경상남도	창원시	
		23		이천시	42		진주시	
		24		김포시	43		김해시	
		25		화성시	44		거제시	
		26		광주시	45		양산시	
						46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20만 명 이하의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을 농촌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하였고(예: 남양주시 진접읍, 천안시 성환읍), 인구 20만 명 미만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하였다(예: 이천시 설성면).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동일한 전화조사 및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³²
-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다.
-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 지역에서 610명, 농촌 지역에서 489명을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분석에서는 농촌 마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한 679명을 농촌 지역 주민으로 포함하여 총 1,77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32 도시·농촌 주민 대상의 정주민족도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표 4-2. 조사 방법 및 개요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778명
표본 오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32\%$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개별면접 조사 병행(마을 삶의 질 조사만 해당)
표본 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8월 22일 ~ 9월 11일

○ 조사 항목은 농촌과 도시 주민 간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분별 중요도와 세부항목별 만족도 그리고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과 이주 이유 등이다(표 4-3).³³

- 농촌과 도시 삶의 질 만족도 비교를 위해 만족도 비교 및 부문별 중요도 평가는 농촌 마을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도입될 안전 부문을 추가하여 선행 조사

- 만족도 질문 시, 만족 정도에 따라 11점 척도(0~10점 부여)를 사용했다.

33 <부록 4>의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표 4-3.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민족도 조사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비 고
삶의 질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 (행복감) ○ 정주 여건을 고려한 삶의 질 만족도 ○ 정주지(마을 및 시·군)의 향후 발전에 대한 인식 	농촌마을 조사와 동일
삶의 질 향상정책 8대 부문별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8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8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부문별로 2~4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의향 ○ 이주하려는 이유 	도시 주민만 응답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 거주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 가족 구성 ○ 가구 소득 ○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 조사응답자는 도시 610명, 농촌 1,168명 등 총 1,778명이며, 60세 이상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거주 기간은 도시지역의 경우 20년 이하가 가장 많으나, 농촌지역은 41년 이상 거주자가 66.9%이다.

표 4-4. 농촌·도시 삶의 질 실태와 정주만족도 조사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도시		농촌		합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전 체		610	100	1,168	100	1,778	100
연령	20대	114	18.7	79	6.8	193	10.9
	30대	125	20.5	86	7.4	211	11.9
	40대	136	22.3	135	11.6	271	15.2
	50대	118	19.3	213	18.2	331	18.6
	60세 이상	117	19.2	655	56.1	772	43.4
거주 기간	20년 이하	407	66.8	203	17.4	610	34.3
	21~30년	120	19.6	85	7.3	204	11.5
	31~40년	41	6.8	99	8.5	140	7.9
	41년 이상	42	6.8	782	66.9	823	46.3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86	14.1	513	43.9	599	38.7
	1~2천만 원 미만	54	8.8	198	16.9	252	16.3
	2~3천만 원 미만	55	9.0	146	12.5	201	13.0
	3~4천만 원 미만	88	14.4	80	6.8	168	10.9
	4천만 원 이상	217	35.7	111	9.5	328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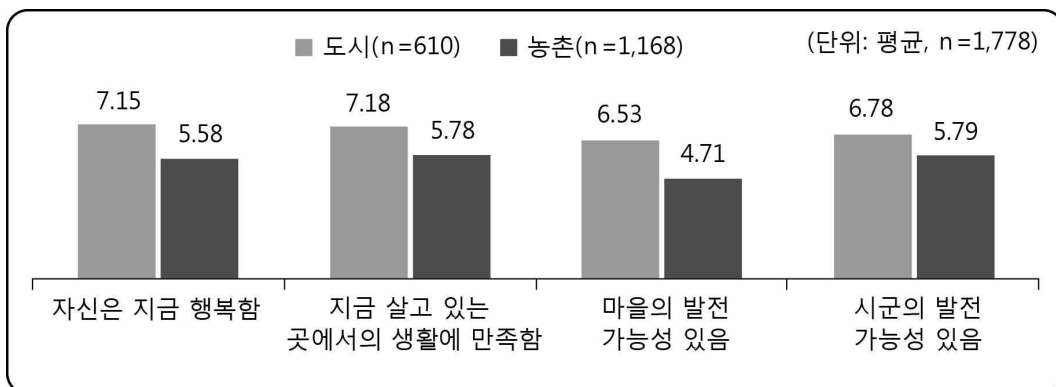
주: 연소득에 대한 무응답자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소득 응답자의 합계는 총 응답자 수와 다름.

4. 주요 분석 결과

○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응답 결과, 10점 만점 평가에서 도시 주민은 평균 7.15점, 농촌 주민은 5.58점으로 농촌 주민의 행복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에서도 도시는 7.18, 농촌은 5.78로 자신의 행복감에 비해 격차는 다소 작으나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촌이 도시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주민들은 시·군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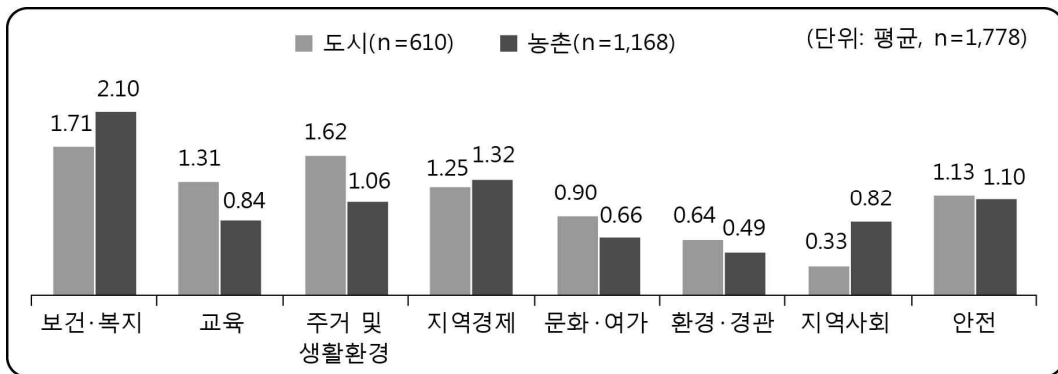
그림 4-1.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비교



○ 삶의 질 정책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농촌과 도시 모두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 ‘지역경제’, ‘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 농촌에 비해 도시는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부문에 대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4-2. 농촌과 도시 중요도 환산점수 비교



○ 도시와 농촌 주민의 부문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지역사회’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고, 그 중에서도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농촌 주민들은 ‘안전’, ‘지역사회’, ‘환경’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고, ‘문화·여가’, ‘지역경제’ 부문의 만족도가 낮았다.
- 도시와 농촌 간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이며, 이어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부문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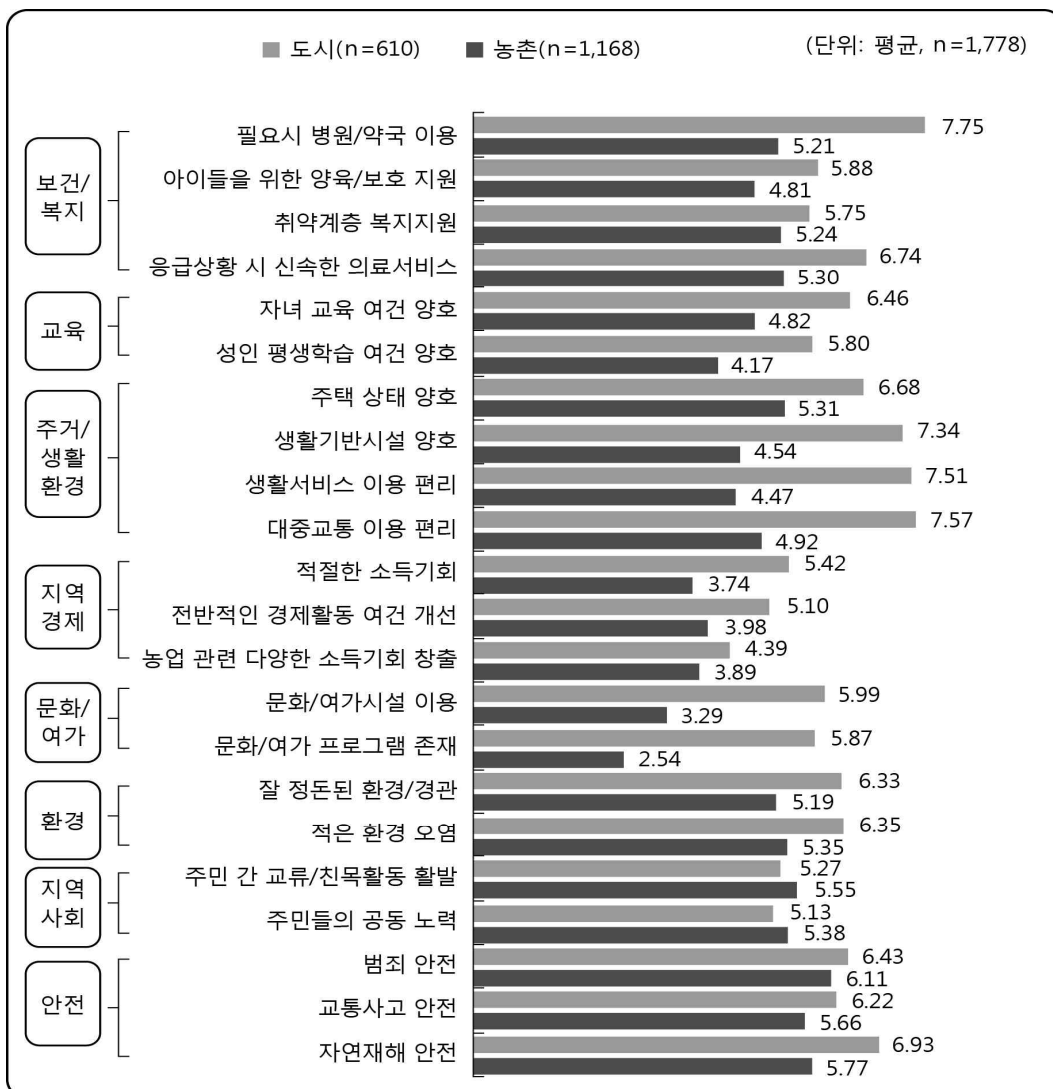
표 4-5. 농촌과 도시 간 부문별 만족도 평균점수

구분	도시	농촌	농촌과 도시 차이 (농촌-도시)
전체	6.28	4.75	-1.54
보건·복지	6.61	5.07	-1.54
교육	6.22	4.41	-1.82
주거 및 생활환경	7.29	4.80	-2.50
지역경제	5.15	3.84	-1.31
문화·여가	6.03	2.87	-3.16
환경·경관	6.35	5.26	-1.09
지역사회	5.18	5.45	0.27
안전	6.54	5.83	-0.71

○ 삶의 질 정책 8대 부문별 만족도 평가에서 농촌은 ‘지역사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과 도시 간 만족도 차이가 큰 항목은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의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도시는 7.5점 내외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농촌은 5점 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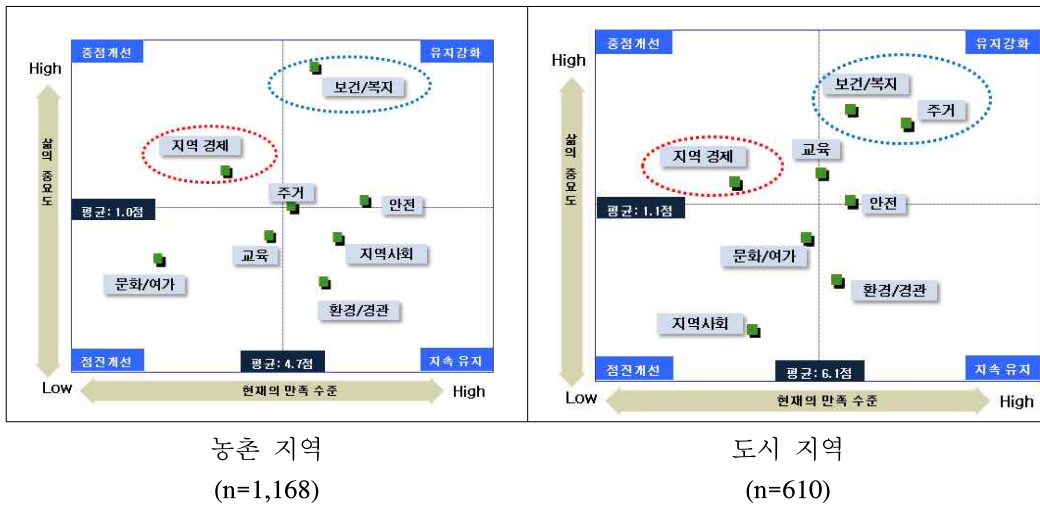
그림 4-3. 농촌·도시 주민의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 8대 정책 부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부문을 사분면에 나타냈다.

- ‘유지 강화’는 농촌은 보건·복지, 도시는 보건·복지·주거·교육·안전이 이에 해당된다.
- ‘중점 개선’은 농촌과 도시 모두 지역경제 부문으로 동일하다.
- ‘지속 유지’는 농촌과 도시 모두 환경·경관 부문이 해당되며, 농촌은 지역사회 부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 ‘점진 개선’은 문화·여가 부문이 두 지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농촌은 교육, 도시는 지역사회가 해당된다.

그림 4-4. 농촌 및 도시 지역 포트폴리오



○ 도시 주민 중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1.6%로, 많은 응답자가 농촌으로의 이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유로는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건강, 자연환경 등의 응답이 많다.

표 4-6.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 및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

이주 의향	빈도 (명)	비율 (%)	이주하려는 이유	빈도	비율
아주 많다	75	12.3	농촌의 전원생활을 희망해서	105	41.3
약간 있다	179	29.3	은퇴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66	26.0
별로 없다	138	22.6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24	9.4
전혀 없다	218	35.7	경제적 이유로	15	5.9
전 체	610	100	가족의 건강이나 교육상의 이유로	13	5.1
			자연환경	13	5.1
			농사를 짓기 위해/농업·농촌에 기 반한 일을 하고 싶어서	12	4.7
			기타	4	1.6
			고향이라서	2	0.8
			합 계	254	100

○ 농촌으로 이주 희망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문제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

- 특히 30~40대에서도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은퇴자의 농촌 이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연령대별 농촌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단위: 명)

이주 희망 이유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농촌의 전원생활을 희망해서	17	8	28	29	23	105
은퇴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3	10	14	31	8	66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4	11	9	24
경제적 이유로	1		2	6	6	15
가족의 건강이나 교육상의 이유로	3	2	3	4	1	13
자연환경	2	2	3	2	4	13
농사를 짓기 위해 /농업·농촌에 기반한 일을 하고 싶어서	1		2	4	5	12
기타	1	1		1	1	4
고향이라서			1	1		2
합 계	28	23	57	89	57	254

-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이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부문이 농촌에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도시 주민들은 삶의 질 부문 중에서 보건·복지,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 등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들 부문은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만족도가 낮다.
 - 도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복지,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의 경우 농촌에서 만족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사회 부문에서 농촌의 만족도가 더 높다.

표 4-8.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중요도별 도시·농촌 간 만족도 비교

도시민의 삶의 질 중요도 순위		만족도 평균점수		
중요도 순위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도시	농촌	농촌과 도시 차이 (농촌-도시)
1	보건·복지	6.61	5.07	-1.54
2	주거 및 생활환경	7.29	4.80	-2.50
3	교육	6.22	4.41	-1.82
4	지역경제	5.15	3.84	-1.31
5	안전	6.54	5.83	-0.71
6	문화·여가	6.03	2.87	-3.16
7	환경·경관	6.35	5.26	-1.09
8	지역사회	5.18	5.45	0.27

○ 보건·복지 부문에서 도시와 농촌 간 차이를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통해 보면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들이 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 부문 중 단위면적당 의료기관 수가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매우 열악하며 이는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도 도시에 비해 농촌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젊은 층의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9. 도시·농촌 간 보건·복지 부문 지표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비교

구 분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지역
보건·복지 부문	0.274	0.200	0.127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0.339	0.315	0.232
1km ² 당 의료기관 수	0.299	0.024	0.006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0.511	0.481	0.244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0.161	0.129	0.072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수	0.060	0.053	0.080

○ 보건·복지 부문에 이어 도시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환경 부문에서도 모든 지표에서 도시와 농촌 간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주택과 상하수도 등 주거 기반시설에서 차이가 크다.

- 노후주택 비율과 상·하수도 보급률 지수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 기반시설의 차이가 도시 주민의 농촌 이주 결정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10.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부문 지표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차이

구 분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지역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	0.785	0.661	0.437
노후주택비율	0.914	0.730	0.434
상·하수도 보급률	0.972	0.794	0.524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 종사자수	0.470	0.460	0.353

표 4-11. 도시 주민의 삶의 질 부문별 만족도 및 삶의 질 지역발전 지수 비교

중요도 순위	부문	만족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지표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1	보건·복지	도시: 6.61 농촌: 5.07	인구 천 명당 의료인수	0.339	0.315	0.232
			1km ² 당 의료기관수	0.299	0.024	0.006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0.511	0.481	0.244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수	0.161	0.129	0.072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수	0.060	0.053	0.080
2	주거 및 생활환경	도시: 7.29 농촌: 4.80	노후주택비율	0.914	0.730	0.434
			상·하수도 보급률	0.972	0.794	0.524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 종사자수	0.470	0.460	0.353
3	교육	도시: 6.22 농촌: 4.41	1km ² 당 학교 수	0.343	0.045	0.016
			교원 1인당 학생 수	0.477	0.404	0.241
			대학진학률	0.548	0.631	0.612
4	지역경제	도시: 5.15 농촌: 3.84	고용률	0.212	0.346	0.571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수	0.307	0.391	0.273
			1인당 지방소득세	0.185	0.253	0.135
			재정자주도	0.450	0.400	0.343

표 4-11. 도시 주민의 삶의 질 부문별 만족도 및 삶의 질 지역발전 지수 비교(계속)

중요도 순위	부문	만족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지표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6	문화·여가	도시: 6.03 농촌: 2.87	문화기반시설 수	0.217	0.249	0.101
			인구 1인당 공원조성 면적	0.142	0.158	0.152
7	환경·경관	도시: 6.35 농촌: 5.26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0.743	0.709	0.780
			1km ²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0.655	0.921	0.976
8	지역사회	도시: 5.18 농촌: 5.45	고령화율	0.866	0.708	0.347
			인구 천 명당 순이동자수	0.121	0.166	0.178
			전출률	0.454	0.574	0.760
			연평균 인구성장률	0.174	0.196	0.175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0.650	0.590	0.534

주: 안전 부문이 중요도 부문 5위이지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에 안전 부문이 없기 때문에 표에서 제외함.

5. 소결 및 시사점

■ 주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 마을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

- 마을과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서 농촌은 두 항목 모두 도시 주민에 비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군에 비해 마을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시·군 발전이 마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지역 내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을 발전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마을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여가 활용에 대한 수요 증대, 그에 따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필요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부문별로 보면 ‘지역사회’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으며, 그 중에서도 ‘문화·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 농촌 주민들은 ‘안전’, ‘지역사회’, ‘환경’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고, ‘문화·여가’, ‘지역경제’ 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도시와 농촌 간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이다.

- 도-농 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지표는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과 시설 이용 항목으로, 두 세부 지표에 대한 농촌 주민의 만족도는 도시 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여가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농촌 주민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여가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일회성 문화 프로그램보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합한 지역 활성화 정책 필요

- 삶의 질 향상 정책 8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서 농촌 주민들은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지역경제’, ‘안전’, ‘주거 및 생활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에서 지역경제 부문보다 보건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어,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는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체감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노인 소득사업 기반의 복지 모델, 공공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합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전원생활을 위한 이주 의향이 높으며, 이주 의향이 실제 이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농 간 정주환경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으로의 이주 희망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대부분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연령층에서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청·장년층에서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은퇴자들의 농촌 이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농촌으로 이주 의향이 실제 이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농 간 정주환경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연령대별 이주 이유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문제로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년층의 농촌 이주에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반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젊은 층에는 창업 자금 지원, 임시 주거 마련 등 농촌 이주를 위한 준비 단계를 지원해주는 정책과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지 체계 정비를 통해 보육·교육 서비스가 농촌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2014년 처음 도입한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는 도시와 농촌 간 정주 격차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중 농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에 비해 ‘보건·복지’, ‘지역경제’, ‘지역사회’ 부문에서 더 높은 중요도 순위를 보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부문은 약 2.5배 더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이는 농촌에서 마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주민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동체 활동 증진이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도시 주민 중 40% 이상이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이주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 도시민의 농촌 이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의 경우 은퇴 후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보다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며, 청년층은 경제적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주 전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간 단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통계로 살펴본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1. 분석 개요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어촌의 분야별 현황을 분석했다.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에 맞게 수집·가공하여 지표화한 것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실태나 삶의 질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실태 보고서와 차이가 있다.
- 2013년에는 별도의 자료집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발간하였으나, 통계자료 수집 결과 원자료의 조사 주기 특성으로 인해 2014년도에 갱신이 불가능한 항목이 53개에 달한다.
 - 2013년에 사용되었던 다수의 자료들이 생산주기, 미발표 등의 이유로 갱신이 어렵다.
- 사회조사, 귀농귀촌인 통계 등 새롭게 발표된 통계를 추가하였다.
 - 사회조사는 격년으로 부문별로 조사되며, 2014년에는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해 조사되었다.
 - 귀촌인 통계는 2013년 시점부터 공표되었다.
- 통계자료가 시·군을 단위로 발표되고 있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일부

군이 도농복합시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자료와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가 통합되어 설치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2014.1.7. 시행).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공주시의 의당면·장기면·반포면의 일부, 청원군 부용면의 일부가 통합되어 1읍 9면 14동(법정동)이다.
 - 2013년 자료집의 행정구역에서 연기군을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통계표에서 도농복합시로 편입시켰다.
- 여주군이 2013년 9월 23일 여주시로 승격되어 2012년 군에서 2013년 도농복합시로 변경되었다(「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9.23. 시행).
 - 여주시는 1읍, 8면, 3동으로 개편되었다.

2. 주요 통계 지표

□ 인구 구성

-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천 1백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농복합시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표 1. 읍·면·동 인구수

(단위: 천 명, %)

구 분		인구 수(2012~2013 증감률)			
		동	읍	면	합계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22,602 (-0.1)			22,602 (-0.1)
	일반시	9,430 (0.5)			9,430 (0.5)
시	도농복합시	9,706 (3.3)	2,377 (1.6)	2,508 (-3.2)	14,591 (1.9)
	군		2,109 (-1.8)	2,410 (-1.9)	4,518 (-1.9)
합계		41,738 (0.8)	4,485 (0.0)	4,918 (-2.6)	51,141 (0.4)

주: 군에는 광역시 5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용진군, 울주군)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13), 주민등록인구(2013년 말 기준)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특히 면에서는 15~64세 이하 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여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가 각각 1.0%p, 1.8%p 증가하였다.

표 2. 읍·면·동 연령별 인구 수 및 고령화율 변화

(단위: 천 명, %)

구 분	연령별 인구수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동	읍	면	합계
총인구	41,738 (0.8)	4,485 (0.0)	4,918 (-2.6)	51,141 (0.4)
15~64세인구	31,168 (0.7)	3,132 (0.0)	3,157 (-3.1)	37,457 (0.3)
65세이상인구	4,343 (5.7)	629 (3.3)	1,279 (1.4)	6,251 (4.5)
고령화율(%p)	10.4 (0.5)	14.0 (0.5)	26.0 (1.0)	12.2 (0.5)
노년부양비(%p)	13.9 (0.7)	20.1 (0.6)	40.5 (1.8)	16.7 (0.7)

자료: 통계청(2013), 주민등록인구(2013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지역별 외국인 수는 도농복합시가 329,0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감률은 일반시가 1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외국인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 분	외국인		평균 외국인 비율(%)
	외국인 수(명)	증감률(%)	
일반시	329,044	12.70	3.00
도농통합시	451,282	9.15	3.07
군지역	139,884	9.12	2.89

주1: 증감률은 2013년 대비 2014년 외국인 수 증감률 임.

주2: 평균 외국인 비율은 지역유형 내 시·군의 외국인비율 평균임.

자료: 행정자치부(201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지역별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률은 전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은 전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표 4. 지역별 인구동향 및 변화

구 분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률	조이혼율
일반시	8.9 (-1.09)	4.5 (-0.12)	6.2 (-0.13)	2.4 (0.08)
도농통합시	8.6 (-1.07)	6.6 (-0.09)	5.8 (-0.09)	2.4 (0.05)
군지역	6.6 (-0.82)	10.7 (-0.31)	4.7 (-0.04)	2.1 (0.02)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값임.

주2: 괄호 안은 2012년 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2013, 2012), 인구동향조사.

- 지역별 순이동자수와 평균 순이동률은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서는 증가하였으며, 일반시는 감소하였다.

표 5. 지역별 순이동자수 및 순이동률

(단위: 명, %)

구 분	순이동자 수	평균 순이동률(변화량, %p)
일반시	-6,351	-0.30 (0.09)
도농통합시	97,977	0.51 (-0.12)
군지역	33,072	0.58 (0.42)

주1: 순이동률은 '순이동자수 / 연앙인구 *100'임.

주2: 변화량은 '2013년 순이동률 - 2012년 순이동률'임.

자료: 통계청(2012; 2013), 국내인구이동통계.

- 2013년 귀농 가구원 수는 약 1만 8천 명이며, 대부분 면부로 귀농을 하였고 50대와 30대 이하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읍부와 면부로 귀농한 가구원을 보면 읍부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더 높고, 면부는 50대의 비율이 높아 지역에 따라 귀농인구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표 6. 2013년 귀농 가구원수 및 연령별 비중

(단위: 명, %)

구 분	귀농가구원수	연령별 비중(%)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18,825	28.4	18.3	32.0	16.1	5.3
읍부	4,173	33.2	18.8	28.7	14.0	5.2
면부	14,652	27.0	18.1	32.9	16.8	5.3

자료: 통계청(2013), 귀농귀촌인통계

- 우리나라 총 면적은 0.1% 증가하였고, '전'·'답'·'임야'는 감소한 반면 '대', '공장용지', '도로' 등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 ‘공장용지’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읍·면에서는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하였다.

표 7. 읍·면·동 주요 지목별 면적

(단위: km², %)

구 분	지목별 면적 및 전년대비 증감률			
	동	읍	면	합계
합계	10,665 (2.5)	14,736 (0.5)	74,865 (-0.3)	100,266 (0.1)
대	1,331 (4.1)	414 (3.4)	1,127 (2.0)	2,872 (3.1)
공장용지	331 (3.6)	176 (11.6)	340 (11.8)	847 (8.4)
도로	772 (5.8)	487 (5.2)	1,780 (3.4)	3,039 (4.3)
전	738 (0.4)	1,408 (0.8)	5,613 (-1.0)	7,759 (-0.6)
답	1,087 (-0.7)	1,907 (-0.2)	8,626 (-1.5)	11,620 (-1.2)
임야	4,627 (1.8)	8,608 (-0.3)	50,941 (-0.4)	64,176 (-0.3)
하천	423 (3.1)	456 (-1.0)	1,961 (-0.4)	2,840 (-0.0)
구거	158 (1.3)	266 (1.0)	1,351 (-0.5)	1,775 (-0.1)
유지	90 (3.3)	161 (2.5)	1,102 (2.6)	1,352 (2.6)
기타	1,108 (5.4)	853 (4.5)	2,025 (3.2)	3,986 (4.1)

자료: 국토교통부(2013), 읍·면·동·리별 지적공부등록지 현황(2013년 말 기준).

□ 기초 생활 인프라

- 자료의 대부분이 주택총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데이트되지 못하였다.
- 우리나라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일반시가 96.4%로 가장 높았으며, 군지역이 59.1%로 가장 낮았다. 상수도 보급률도 일반시가 99.5%로 가장 높았으며, 군지역이 76.7%로 가장 낮았다. 전 지역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하수도 보급률을 상회하였다.

표 8. 평균 하수도 및 상수도 보급률

(단위: %)

구 분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일반시	96.4	99.5
도농통합시	80.2	90.5
군지역	59.1	76.7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주3: 상수도 보급률은 자료가 없는 광역시 내 5개 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환경부(2013), 상수도 통계; 하수도 통계.

- 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일반시가 7,17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증감률은 전년대비 10% 감소함으로써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군지역이 5.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감률은 -5.5%로 나타났다.

표 9. 구급 서비스 및 자동차 사망 사고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명)		자동차 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2013년	2012~2013 증감률	2013년	2012~2013 증감률
일반시	7,177	-10.0	1.80	-1.9
도농통합시	4,785	6.2	3.50	-5.3
군지역	1,697	4.3	5.72	-5.5

주: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안전행정부, 내고장 알리미(<https://www.laiis.go.kr/>)

□ 경제활동

-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도농복합시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군의 종사자는 0.4% 감소하였다.

표 10. 읍·면·동 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

구 분		사업체 종사자수 및 전년대비 증감률			
		동	읍	면	합계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8,790 (1.8)	-	-	8,790 (1.8)
	일반시	3,003 (2.7)	-	-	3,003 (2.7)
	도농복합시	3,238 (3.4)	832 (7.6)	1,204 (7.5)	5,274 (5.0)
군		-	798 (0.7)	704 (-1.7)	1,502 (-0.4)
합계		15,031 (2.3)	1,630 (4.1)	1,908 (3.9)	18,569 (2.6)

자료: 통계청(2013),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

- 우리나라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는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 도농통합시가 가장 많았다.

표 11.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 명, %)

구 분	합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일반시	4,465 (0.9)	3,505 (2.8)	2,460 (-1.9)	1,045 (-0.7)
도농통합시	7,028 (2.7)	4,830 (3.6)	3,433 (2.2)	1,397 (1.5)
군지역	2,108 (2.5)	900 (4.9)	589 (2.2)	312 (1.5)

주: 괄호 안은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2014 1/2, 2013 1/2), 지역별고용조사.

- 2013년 우리나라 농가는 약 114만 가구이며, 가구원수는 284만 명으로 각각 2012년에 비해 0.8%, 2.2%가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다문화 농가와 농가 인구는 다소 증가하였다.

- 농가와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다문화 농가와 농가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농가에서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증가하고 있다.

표 12. 농가 및 다문화 농가 증감률

(단위: 가구,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농가 (가구)	1,151,116	1,142,029	-0.8
농가인구 (명)	2,911,540	2,847,435	-2.2
다문화농가 (가구)	14,794	14,952	1.1
다문화농가 인구 (명)	66,081	67,040	1.5

자료: 통계청(2013), 농림어업조사

- 2013년 전업농가는 약 60만 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2.9% 감소하였으나, 겸업 농가는 1.7% 증가하여 점차 농가 소득원이 다각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종 겸업농가와 2종 겸업농가가 각각 1.8%, 1.6% 증가하여 겸업의 유형별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 전업·겸업 농가 증감률

(단위: 가구,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합계	1,151,116	1,142,029	-0.8	
전업	625,376	607,385	-2.9	
겸업	소계	525,740	534,645	1.7
	1종 겸업	169,272	172,310	1.8
	2종 겸업	356,468	362,335	1.6

자료: 통계청(2013), 농림어업조사

- 2013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약 3천 4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3%가 증가하였고 농가의 순소득은 13.3%증가하였으며, 1종 겸업 농가의 소득 증가율이 다소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소득을 보면 2종 겸업 농가의 소득이 약 4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아 농업의 비중이 높은 농가의 어려움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농가 전업·겸업별 소득 변화

(단위: 천 원, %)

구 분	농가소득	농가순소득
평균	34,524 (11.3)	25,740 (13.3)
전업	26,864 (11.6)	17,048 (12.4)
1종겸업	39,054 (13.4)	29,978 (15.4)
2종겸업	42,975 (8.7)	35,739 (11.2)

자료: 통계청(2013), 농가경제조사

- 지난 1년간 농가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농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수가 14.7%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축산물 직거래와 농축산물 가공업을 하는 농가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농축산물 직거래 농가의 증가는 유통구조의 변화가 농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또한 농축산물 가공업 농가의 증가는 6차산업화 등 생산물 가공 기반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15. 농업 관련 사업 증가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합계	119,149	136,624	14.7
농축산물 직판장	6,174	5,577	-9.7
농축산물 직거래	82,440	98,258	19.2
식당 경영	10,559	11,566	9.5
농축산물 가공업	12,083	13,687	13.3
농기계작업 대행	13,423	14,093	5.0
농촌관광사업	4,158	4,462	7.3

자료: 통계청(2013), 농림어업조사

□ 보건·복지

-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에서는 의료인력 수는 도농통합시가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가장 많았으며, 증감률 또한 모든 인력부문에서 가장 높았다.

표 16.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의료인력 수			2012~2013 증감률		
	의사	간호사	약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일반시	23,484	22,878	5,971	4.0	9.2	1.0
도농통합시	28,335	32,488	7,912	4.3	10.7	0.4
군지역	7,630	6,760	2,244	3.5	2.7	1.2

주1: 의사에는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일반의,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음.

주2: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금산군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2013), 지역별의료이용통계.

- 지역별 의료인력 현황에서는 의료인력 수는 도농통합시가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가장 많았으며, 증감률 또한 모든 인력부문에서 가장 높았다.

표 17. 지역별 의료기관 수

(단위: 개, 개/km²)

구 분	의료기관 수		단위면적당 의료기관 수	
	병·의원	약국	병의원	약국
일반시	10,563 (1.99)	3,662 (0.44)	5.45	1.87
도농통합시	13,825 (2.54)	5,386 (1.03)	0.42	0.16
군지역	3,684 (1.88)	1,782 (-0.06)	0.08	0.04

주1: 병·의원에는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음.

주2: 괄호 안은 2012년 대비 2013년의 증감률.

주3: 단위면적당 의료기관 수는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2013), 지역별의료이용통계.

-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에서 ‘의료비가 높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읍·면부에서는 치료 결과의 미흡, 긴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에 대한 불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읍·면부는 동부에 비해 의료시설의 낙후나 미비,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도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의료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합계	100	100	100
불친절하다	11.1	11.2	10.3
의료비(약값)가 높다	24.9	26.1	17.5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20.6	20.0	24.2
진료가 불성실하다	9.4	9.6	8.6
진료 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20.2	19.8	22.5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2.6	2.2	5.1
필요이상으로 진료(검사 등)를 많이 한다	8.6	9.1	5.8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2.5	2.0	5.2
기타	0.2	0.1	0.7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 지역별 주관적 건강수준인지는 일반시가 44.5%로 가장 높으며,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군지역이 39.4%로 가장 높았다.

표 19. 주민의 건강수준 및 자살률

(단위: %)

구 분	주관적 건강수준인지는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일반시	44.5 (-0.64)	28.2 (1.5)
도농통합시	41.6 (-0.01)	31.3 (-1.7)
군지역	41.2 (1.30)	39.4 (-1.6)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값임.

주2: 괄호 안은 2012년 대비 변화량임.

주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는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2013),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2013), e-지방지표.

- 읍·면주민들은 동부에 비해 자살충동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충동 이유에서는 동부와 달리 신체적·정신적 질환·장애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자살충동은 2014년 보고서에 처음 제시된 자료이다.

표 20. 읍·면·동별 자살충동 및 주요 이유

(단위: %)

구 분		동부	읍·면부
자살충동률		6.9	6.0
이유 (응답률)	1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8.6)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0.7)
	2위	가정불화로 인해 (14.1)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19.5)
	3위	외로움, 고독 때문에 (11.8)	외로움, 고독 때문에 (17.9)

주: 응답률은 자살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선택 비율임.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 교육

- 우리나라의 유치원 수는 3,160개로 중소도시에 가장 많았으며, 학생수도 중소도시가 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수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지역, 도서벽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면지역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21. 유치원·초등학교 수 및 학생수

(단위: 개, 천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수 (증감 수, 개)	학생 수 (증감률, %)	학교 수 (증감 수, 개)	학생 수 (증감률, %)
대도시	2,677 (63)	265 (-1.7)	1,671 (9)	1,116 (-2.6)
중소도시	3,160 (85)	283 (-0.1)	1,755 (17)	1,152 (-2.0)
읍지역	993 (5)	62 (-1.7)	649 (-2)	266 (-1.4)
면지역	1,620 (-7)	39 (1.0)	1,523 (-2)	171 (1.3)
도서벽지	376 (2)	4 (-5.3)	336 (-1)	23 (-3.9)
합계	8,826 (148)	653 (-0.9)	5,934 (21)	2,729 (-2.0)

주: 증감 수 및 증감률은 2013년 대비 2014년 증감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유초중등교육통계.

- 중학교 수는 대도시 지역이 1,000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의 수는 719명으로 중소도시 지역에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의 수는 822개로 대도시에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수도 793명으로 대도시에 가장 많았다. 모든 지역에서 중·고등학생의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중학교·고등학교 수 및 학생수

(단위: 개, 천 명)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증감 수, 개)	학생 수 (증감률, %)	학교 수 (증감 수, 개)	학생 수 (증감률, %)
대도시	1,000 (4)	719 (-5.6)	822 (2)	793 (-4.1)
중소도시	957 (9)	744 (-4.5)	819 (6)	781 (-2.2)
읍지역	357 (-1)	154 (-3.2)	322 (2)	159 (-0.4)
면지역	733 (2)	88 (-3.1)	299 (-3)	95 (-1.7)
도서벽지	139 (-1)	13 (-5.2)	64 (-3)	12 (-0.6)
합계	3,186 (13)	1,718 (-4.8)	2,326 (4)	1,839 (-2.8)

주1: 증감 수 및 증감률은 2013년 대비 2014년 증감임.

주2: 고등학교에는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4), 유초중등교육통계.

- 전국 13세 이상 인구 중 교육기회가 미충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부는 절반 이상이 미충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지역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단위: %)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충족	50.2	52.3	40.6
미충족	49.8	47.7	59.4

주: 13세 이상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 지역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요인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학비 마련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에서는 부모 등의 사고방식, 집안 돌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읍·면부에서 동부보다 부모 등의 사고방식, 집안 돌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개인적인 요인보다 가족의 상황이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지역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요인

(단위: %)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합계	100.0	100.0	100.0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53.4	54.3	50.0
학교가 멀어서	2.1	2.0	2.6
입학시험 실패	13.6	14.8	9.2
부모 등의 사고방식	19.3	17.5	25.8
집안 돌봄	8.9	8.8	9.3
질병, 신체적 장애	1.1	1.0	1.6
기타	1.7	1.7	1.6

주: 13세 이상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 사교육 참여율은 대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일반교양과 취업 관련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예체능, 취미, 교양과목 사교육 참여율만 증가하였다.

표 25.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p)

과목 및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교육 참여율		71.4 (-0.5)	70.2 (-0.1)	57.5 (-0.5)
과목	일반교과	60.0 (-1.1)	58.1 (-1.5)	46.0 (-0.4)
	예체능, 취미, 교양	32.7 (0.6)	33.6 (2.8)	26.0 (-1.3)
	취업 관련	0.3 (-0.3)	0.3 (-0.2)	0.2 (-0.1)

주: 괄호는 2012년 대비 2013년의 참여율 감소량(%p)임.

자료: 통계청(2012, 2013), 사교육비조사

□ 문화·여가

-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농복합시가 85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시는 공공도서관,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은 등록 박물관이 문화기반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6. 2013년 문화기반시설 수 및 구성 비율

(단위: 개, %)

구 분	합계	공공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일반시	296	134 (45.3)	72 (24.3)	24 (8.1)	26 (8.8)	22 (7.4)	18 (6.1)
도농통합시	852	298 (35.0)	317 (37.2)	62 (7.3)	65 (7.6)	59 (6.9)	51 (6.0)
군지역	565	165 (29.2)	171 (30.3)	47 (8.3)	72 (12.7)	82 (14.5)	28 (5.0)

자료: 안전행정부, 내고장 알리미(<https://www.laiis.go.kr/>)

- 여가 활용 만족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26.5%가 만족(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읍·면부는 만족 비율이 23.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읍·면부에서는 불만족(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비율도 27.3%로 동부(24.7%)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여가 생활에서 농촌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 지역별 여가 활용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100.0	6.3	20.2	48.1	19.2	6.3
동부	100.0	6.8	21.0	47.6	18.5	6.2
읍·면부	100.0	5.9	17.9	48.9	21.0	6.3

주: 13세 이상 인구에 대한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4), 사회조사

-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에서 동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읍·면부에서는 시간 부족, 건강·체력 부족의 비율이 동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읍·면부 주민들은 동부에 비해 여가 활용 기회가 적고 접근성이 나쁘며, 고령화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8.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합 계	100.0	100.0	100.0
경제적 부담	58.2	59.9	48.3
시간 부족	21.0	20.7	22.7
교통 혼잡	1.6	1.6	1.9
여가 시설 부족	1.7	1.5	2.9
여가 정보 부족	1.2	1.2	1.0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4.5	4.9	4.0
건강, 체력 부족	9.4	7.8	15.7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2.3	2.1	3.3
기타	0.2	0.2	0.2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환경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의 면적은 도농통합시가 가장 넓으며, 폐수배출 업소 수도 도농통합시가 가장 많았다. 군지역의 폐수배출 업소 수는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표 29. 도시공원 면적 및 폐수 배출 업소

(단위: m², %, 개)

구 분	인구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폐수배출 업소 수	
	면적(m ²)	2012~2013 증감률(%)	업소 수(개)	2011~2012 증감률(%)
일반시	25.79	-1.7	6,699	2.9
도농통합시	32.07	-0.2	21,694	3.5
군지역	28.23	-1.7	8,294	-0.7

주: 인구 천 명 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값임.

자료: 국토교통부(2012; 2013), 도시계획현황, 환경부(2011; 2012),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자료 다운로드: 통계청 e-지방지표)

부록 2

지역 구분 및 시·군명

구 분	지역 수	시·군명
합계	160	
일반시	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청주시, 전주시, 목포시
도농 복합시	55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원시, 제주시, 서귀포시
군	83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용진군, 울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록 3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조사표

<p>안녕하십니까?</p> <p>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농촌 마을의 삶의 모습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p> <p>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처리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p> <p>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8월</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p> <p style="text-align: center;">※ 연구 책임: 심재현 부연구위원(☎ 02-3299-0000) / 권인혜 연구원(☎ 02-3299-0000)</p> <p>*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p> <p>*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p>

♣ 다음은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마을과 지역(시·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종합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 ⑩	() 점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 ⑩	() 점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 점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 점

2. 다음의 8대 부문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1위부터 3위까지만 골려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
[보건·복지] 적절한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여건	()위
[교육] 아이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위
[주거 및 생활환경]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	()위
[지역경제]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	()위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	()위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경관 여건	()위
[지역사회] 주민들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을 일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여건	()위
[안전]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안전 여건	()위

3. 다음은 마을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여건에 대한 만족 정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반드시 '마을 안'이 아니라도,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범위에서의 여건에 대하여 질문

부문	설문 문항	0점	10점	점수
보건 복지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0	10	()점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0	10	()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0	10	()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0	10	()점
교육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0	10	()점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0	10	()점
주거 및 생활 환경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0	10	()점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0	10	()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0	10	()점
지역 경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0	10	()점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0	10	()점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0	10	()점
문화 여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 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0	10	()점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0	10	()점
환경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0	10	()점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0	10	()점
지역 사회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0	10	()점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0	10	()점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0	10	()점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	10	()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	10	()점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	10	()점

4. 선생님은 동네/마을 행사나 모임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 ③ 가끔 참여하는 편이다 ④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선생님께서는 향후 5년 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반반이다 ③ 그렇지 않다

5-1. (5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에 답한 경우)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다면,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면에서 읍으로 ② 현재 살고 있는 읍(면) 내의 다른 마을로
- ③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의 다른 마을로(다른 면, 동)
- ④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으로(농촌으로) ⑤ 다른 시의 동지역으로(도시로)

5-2. (6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에 답한 경우) 선생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기입,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기술했다

[보기]		
주거 및 생활 인프라	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③ 교통이 불편하다	
	④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⑤ 난방비가 많이 든다	
경제활동	⑥ 구직, 창업, 직장 이동 등 직업/더 나은 소득기회 관련 이유	
	⑦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	⑧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	
교육	⑨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⑩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환경·경관	⑪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건·복지	⑫ 의료서비스 환경이 좋지 않다	
문화·여가	⑬ 문화·여가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	
그 외	⑭ 가족 관련 사유(가구원 변동 등)	
	⑮ 치안이 불안해서	
	⑯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	
☞ ⑰ 기타: (_____)		

6. 귀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방형으로 질문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도 ()군·시 ()읍·면 ()리(행정리)

자연마을명: (_____)

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다.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라.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을 답해주십시오.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관공서/회사)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무직/퇴직/기타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⑨ 기타(무엇: _____)

마. 선생님 닥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신 ② 부부 ③ 부부+미혼자녀
 ④ 부부+기혼자녀 ⑤ 조부모+부부+손자녀 ⑥ 조부모+손자녀(조손가족)
 ⑦ 부부+(시)부모 ⑧ 기타 ()

바. 선생님 닥에는 자가용 차량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사. 현재의 마을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아.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1. (아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자. 선생님 택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의 월급·상여금·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곤란해 하면 보기 제시

-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⑥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처리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 연구 책임: 심재헌 부연구위원(☎ 02-3299-0000) / 권인혜 연구원(☎ 02-3299-0000)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 다음은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공통] 지금 마을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2. [공통]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	그렇다	점수
종합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	⑩	()점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	⑩	()점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점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점

3. [공통] 다음의 8대 부문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1위부터 3위까지만 골려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
[보건·복지] 적절한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여건	() 위
[교육] 아이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 위
[주거 및 생활환경]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	() 위
[지역경제]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	() 위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	() 위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경관 여건	() 위
[지역사회] 주민들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을 일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여건	() 위
[안전]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안전 여건	() 위

4. [공통] 다음은 살고계신 곳의 생활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0	10	점수
보건 복지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0	10	() 점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0	10	() 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0	10	() 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0	10	() 점
교육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0	10	() 점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0	10	() 점
주거 및 생활 환경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0	10	() 점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0	10	() 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0	10	() 점
지역 경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0	10	() 점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0	10	() 점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0	10	() 점
문화 여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 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0	10	() 점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0	10	() 점
환경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0	10	() 점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0	10	() 점
지역 사회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0	10	() 점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0	10	() 점
안전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0	10	() 점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	10	() 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	10	() 점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	10	() 점

5. [도시주민만] 앞으로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아주 많다 ⇒ 5-1번 문항으로
- ② 약간 있다 ⇒ 5-1번 문항으로
- ③ 별로 없다 ⇒ 6번 문항으로
- ④ 전혀 없다 ⇒ 6번 문항으로

5-1. (5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에 답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기입,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기술

[보기]

- ① 도시의 분주함, 혼잡함을 떠나고 싶어서 / 농촌의 여유로운 생활방식(전원생활)을 희망해서
- ② 농사를 짓기 위해 / 농업·농촌에 기반한 일을 하고 싶어서
- ③ 생활비를 줄이려고 (경제적 이유로)
- ④ 가족(나 포함)의 건강이나 교육상의 이유로
- ⑤ 은퇴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 ⑥ 가족(본인 포함)의 건강(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 ⑦ 기타: ()

6. [공통] 생활폐기물(음식, 폐비닐, 빈병, 플라스틱, 기타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모든 폐기물을 행정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 ② 일부 폐기물은 수거해 가지만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방치된다
- ③ 개인이 각 가정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방치한다
- ④ 마을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만 충분치 않다
- ⑤ 처리 되지 않은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간다

마.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주시요.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관공서/회사)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⑨ 기타(_____)

바. **선생님 댁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신 ② 부부 ③ 부부+미혼자녀
 ④ 부부+기혼자녀 ⑤ 조부모+부부+손자녀 ⑥ 조부모+손자녀(조손가족)
 ⑦ 부부+(시)부모 ⑧ 기타 (_____)

사. **선생님 댁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주택) ⑤ 기타(_____)

아 **선생님 댁의 주택 거주(점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기타(_____)

자. **선생님 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의 월급·상여금·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곤란해 하면 보기 제시

-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2013년 및 2014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

부문	2013년	2014년	비고
보건 복지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쉽게 갈 수 있다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 보호가 잘 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 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가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교육	우리 시·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우리 시·군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성인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주거 및 생활 환경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하다	주택들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우리 마을은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우리 마을은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신규
지역 경제	우리 지역에서는 적절한 소득기회(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신규
	-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농업에 기반한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신규
	나는 생활하는 데 경제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다	-	삭제

부문	2013년	2014년	비고
문화 여가	우리 지역에서는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환경 경관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우리 지역은 쓰레기·분뇨·폐수·매연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지역 사회	마을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 마을은 주민들이 합심해서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친지, 이웃이 충분히 있다	-	삭제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삭제
안전	-	철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신규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신규
	-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신규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송미령·채종현. 20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민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성주인·채종현·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심재현·노승철·권인혜·류경선.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 (<http://www.nier.go.kr/>)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stat.mltm.go.kr>)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 (<http://stat.mest.go.kr/>)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 (<http://www.istans.or.kr/>)
- 안전행정부, 재정고 (<http://lofin.mospa.go.kr>)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포털 (<http://www.redis.go.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http://mdss.kostat.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홈페이지 (<http://survey.keis.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 (<http://etips.me.go.kr/>)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